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행정학 석사 학위논문

출산장려금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최 은 아

출산장려금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박 상 인

이 논문을 행정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최 은 아

최은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12월

위 원 장 _____ 정 광 호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고 길 곤 _____ (인)

위 원 _____ 박 상 인 _____ (인)

국문초록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격한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 시기에 직면해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인 출산장려금 지급은 2000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어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정책으로 현 시점에서는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출산 산모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 집행에도 불구하고 2004년부터 현재까지의 출산율 지표는 그리 높아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산장려금의 지급이 실제로 출산율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료수집이 가능한 179개의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인구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그 영향을 검증하였다.

패널 회귀분석을 통해 합계출산율 model 1, 총 출생아수 model 2, 연령별 출산율 model 3, 출생순위별 출생아수 model 4의 모형으로 나눠 출산장려금이 해당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고, 그 결과 출산장려금의 액수가 비교적 큰 전라도, 경상도에서는 출산율에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출산장려금의 액수가 적고 혜택을 받는 대상이 다수인 수도권에서는 출산장려금의 혜택이 미미함을 밝혀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론으로 출산장려금 정책의 접근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전체 예산규모가 크지만 정책수혜자가 많아

상대적으로 적은 출산장려금을 지급받는 수도권외의 경우, 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투자, 출산 이후 육아 서비스 증대 지원을 통해 출산에 대한 방법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의 경우 현재의 방식대로 수도권보다 많은 출산장려금 지급을 통해 출산율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주요어 : 출산장려금, 합계출산율, 총 출생아수, 연령별 출산율, 출생 순위별 출생아수, 패널회귀분석

학 번 : 2013-23609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한국의 저출산 현황과 출산장려정책	3
1. 한국의 저출산 현황	3
2.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	6
제 3 장 선행연구의 검토	9
1. 해외 선행연구	9
2. 국내 선행연구	11
3. 선행연구 정리와 한계	17
제 4 장 분석단위와 변수의 설정	19
1. 분석 단위	19
1) 연구대상	19
2) 분석방법	21
2. 변수의 설정	21
1) 종속변수	21
2) 독립변수	23
3) 통제변수	24
3. 가설 설정	26
4. 분석모형	28
제 5 장 분석 결과	29

1. 기초통계를 통한 비교분석	29
1) 전국 출산장려금 기초 통계	29
2) 전국 연령별 출산율	30
3) 전국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30
4) 지역별 출산장려금 기초통계	31
(1) 서울	32
(2) 경기	34
(3) 충청	36
(4) 경상	38
(5) 전라	40
(6) 강원	42
2. 전국 출산장려금, 합계출산율, 총 출생아수 기초통계	44
3. 전국 연령별 출산율 기초통계	45
4. 전국 출생순위별 출산금 및 출생아수 기초통계	46
5. 상관관계 분석	47
제 6 장 분석결과	49
1. 하우스만 검정	49
2. 전국 분석결과	51
3. 서울시 분석결과	52
4. 경기도 분석결과	54
5. 충청도 분석결과	56
6. 강원도 분석결과	58
7. 전라도 분석결과	60
8. 경상도 분석결과	62
제 7 장 결론	64

1. 연구의 결과	64
2. 연구의 시사점	65
3. 연구의 한계	68
참고문헌	69
Abstract	73

표 목 차

[표 1] 출생아수, 조출생률 및 합계출산율, 2005-2014	4
[표 2]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2014년	5
[표 3] 국내 선행연구 정리	15
[표 4]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	19
[표 5] 연구 대상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	20
[표 6] 전국 출산장려금 기초통계	29
[표 7] 전국 연령별 출산율	30
[표 8] 전국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30
[표 9] 서울 출산장려금 기초통계	32
[표 10] 서울 연령별 출산율	33
[표 11] 서울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수	33
[표 12] 경기 출산장려금 기초통계	34
[표 13] 경기 연령별 출산율	35
[표 14] 경기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수	35
[표 15] 충청 출산장려금 기초통계	36
[표 16] 충청 연령별 기초통계	37
[표 17] 충청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수	37
[표 18] 경상 출산장려금 기초통계	38
[표 19] 경상 연령별 출산율	39
[표 20] 경상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수	39
[표 21] 전라 출산장려금 기초통계	40
[표 22] 전라 연령별 기초통계	41
[표 23] 전라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수	41
[표 24] 강원 출산장려금 기초통계	42
[표 25] 강원 연령별 기초통계	43

[표 26]	강원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수	43
[표 27]	전국 출산장려금, 합계출산율, 총 출생아수 기초통계 비교 ·	44
[표 28]	전국 연령별 출산율 기초통계 비교	45
[표 29]	전국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수 기초통계비교 ····	46
[표 30]	상관관계 분석 (총출생아수)	47
[표 31]	상관관계 분석 (합계출산율)	48
[표 32]	전국의 합계출산율, 총 출생아수, 연령별 출산율, 출생순위별 출생아수 결과표	50
[표 33]	서울의 합계출산율, 총 출생아수, 연령별 출산율, 출생순위별 출생아수 결과표	53
[표 34]	경기도의 합계출산율, 총 출생아수, 연령별 출산율, 출생순위별 출생아수 결과표 ····	55
[표 35]	충청도의 합계출산율, 총 출생아수, 연령별 출산율, 출생순위별 출생아수 결과표 ····	57
[표 36]	강원도의 합계출산율, 총 출생아수, 연령별 출산율, 출생순위별 출생아수 결과표 ····	59
[표 37]	전라도의 합계출산율, 총 출생아수, 연령별 출산율, 출생순위별 출생아수 결과표 ····	61
[표 38]	경상도의 합계출산율, 총 출생아수, 연령별 출산율, 출생순위별 출생아수 결과표 ····	63
[표 39]	종합 결과표 요약	67

그림 목 차

[그림 1]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2006-2015	3
[그림 2]	연구의 분석틀	28

식 목 차

[식 1]	하우스만 검정 결과	49
-------	------------------	----

I. 서론

‘아이가 울지 않는 나라’, ‘늙은 대한민국’이라는 말은 더 이상 우리에게 생소한 말이 아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2015년 전국 합계 출산율¹⁾은 1.23이다. 이 수치는 2014년 OECD 평균출산율인 1.68에 비하면 월등히 낮은 수치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5년을 기점으로 크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나라는 노동력 부족 국가로의 전환과 노동력 고령화로 진행이 급속화 되어 주요 산업 부문에서의 노동력이 빠르게 고령화될 것이다. 또한 구매력이 높은 노동인구의 감소와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낮은 노인 인구의 증가로 내수시장이 위축되고 이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금, 보험료 납부 인구는 감소하고 수급하는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의 부담이 증가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복지지출이 상승하여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여 대학 정원보다 고교졸업자 수가 적어 대학 간의 격차와 고등교육의 질적인 하락 그리고 대학 인프라 과잉 현상 등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저출산은 장기적으로 산업에 투입되는 노동력 부족과 소비인구 감소에 따른 국내 시장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생산인구의 감소와 경제 위축, 국가재정지출 증가 등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저출산의 원인을 살펴보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증가, 여성의

1)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나타낸다.

사회 참여 증가, 의료기술의 발달, 결혼 연령 상승 및 미혼 인구 증가 등의 사회 경제적 요인과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출산율 저하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에 비해 육아를 지원하는 시설과 서비스는 현저히 부족하여 마음 놓고 여성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또한 출산율 피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다.

저출산 현상이 계속 될 경우 발생할 ‘인구절벽’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보육시설의 확충, 출산비 지원, 육아 휴식 확대 및 자녀 교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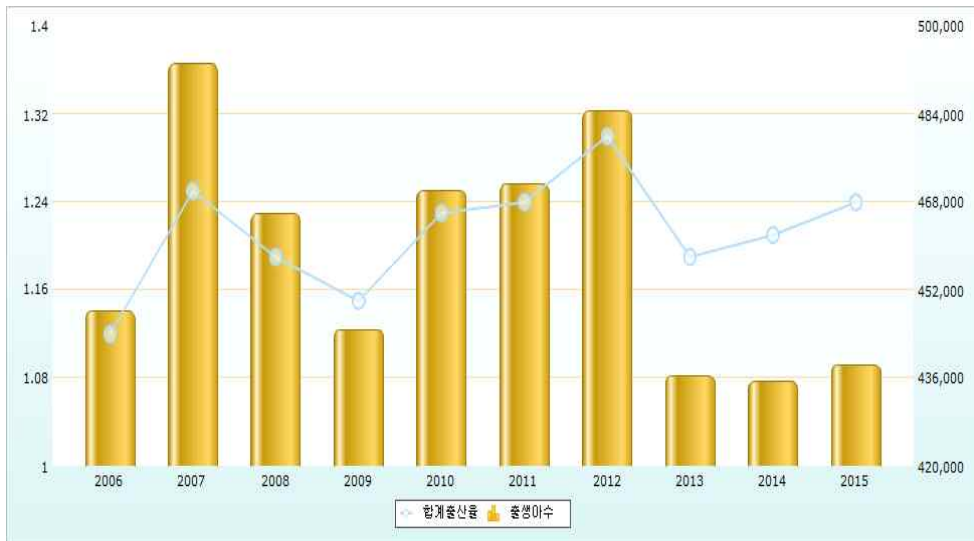
그 중 하나가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출산장려금 정책이다. 출산장려금 정책은 최초도입인 2000년을 시작으로 2005년부터 활발히 시행되어 온 정책으로 다른 정책에 비해 아직은 역사가 짧은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된 선행연구에서는 정책 효과에 관해 상반된 결과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정책의 시행 및 효과에 관해서 끊임없는 논란이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정책이 가장 활발하게 시행된 시기인 2004년을 기점으로 약 10년 동안의 기간을 되짚어 봄으로써 정책의 효과에 대해 검증하여 현 상황을 파악하고 새로운 출산장려 정책의 대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장 한국의 저 출산 현황과 출산장려 정책

1. 한국의 저출산 현황

저 출산 현상이라고 하면 합계출산율이 2.1미만인 국가를 말한다. 한국은 1960년 6.0명에서 20년 사이에 1983년 2.06명으로 감소 한 이후 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30년 동안 저 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지난 15년 동안은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으로 하락하여 초저출산 현상이 나타나 계속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인구전망을 극단적으로 가정한 통계에서는 2084년에는 현재 인구의 절반으로 줄고, 이후에도 2172년 500만명, 2256년 100만명으로 점차 줄어들다가 2750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멸종할 수도 있다고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림 1]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2006-2015



자료 : 통계청, 2015년 출생통계

[표 1] 출생아 수, 조출생률 및 합계출산율, 2005-2014

(단위: 천 명, %, 명, 인구 1천 명당 명, 가임여자 1명 당 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출생아 수		435.0	448.2	493.2	465.9	444.8	470.2	471.3	484.6	436.5	435.4
전 년 대 비	증 감	-37.7	13.1	45.0	-27.3	-21.0	25.3	1.1	13.3	-48.1	-1.0
	증감률	-8.0	3.0	10.0	-5.5	-4.5	5.7	0.2	2.8	-9.9	-0.2
1일 평균 출생아 수		1,192	1,228	1,351	1,273	1,219	1,288	1,291	1,324	1,196	1,193
조출생률		8.9	9.2	10.0	9.4	9.0	9.4	9.4	9.6	8.6	8.6
합계출산율		1.08	1.12	1.25	1.19	1.15	1.23	1.24	1.30	1.19	1.21
전 년 대 비	증 감	-0.08	0.05	0.13	-0.06	-0.04	0.08	0.02	0.05	-0.11	0.02
	증 감 률	-6.8	4.4	11.3	-4.6	-3.6	6.7	1.5	4.3	-8.5	1.5

자료 : 통계청, 2014년 출생통계

이와 비교하여 OECD 국가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960년대에 3.65명에서 2002년 1.63까지 감소하였지만 이후 약간 상승하여 1.7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OECD에서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초저출산현상을 경험한 국가 중 주요 국가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탈리아의 경우 1993년에 초저출산국가에 도달하여 11년 동안 지속되다가 2013년에 이를 극복하였고, 독일의 경우 1992년 초저출산현상을 4년 동안 지속하다가 2013년에는 1.41로 상승하였다. 국가의 보육시설 프로그램이 가장 잘 짜여진 곳으로 알려진 곳 중의 한 나라인 프랑스(2014년 기준 합계출산율 1.98)는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키워준다”라는

모토 아래 3살부터 무료 보육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 집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 2003년에 초저출산국가가 되었지만 2013년에 이를 탈피하였다. 결국, 초저출산 현상을 경험한 나라 중 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초저출산현상을 극복했다.

[표 2]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2014년

국가	합계 출산율	국가	합계 출산율	국가	합계 출산율
이스라엘	3.08	노르웨이	1.76	일본	1.42
멕시코	2.20	벨기에	1.72	헝가리	1.41
터키	2.17	네델란드	1.71	이탈리아	1.37
프랑스	1.98	핀란드	1.71	슬로바키아	1.35
아일랜드	1.95	덴마크	1.69	스페인	1.32
아이슬란드	1.93	캐나다 ('12)	1.61	그리스	1.30
뉴질랜드	1.92	슬로베니아	1.58	폴란드	1.29
스웨덴	1.88	에스토니아	1.54	포르투갈	1.23
미국	1.86	스위스	1.54	칠레('13)	1.79
영국	1.81	룩셈부르크	1.50	오스트리아	1.46
호주	1.80	독일	1.47	한국	1.24
OECD 평균 1.68					

* 출처 : OECD, Family Database

또한, 출산율의 하락과 함께 출산을 하는 연령층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70년~80년대에는 25-29세가 출산에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그 이후에는 급격히 하락하였다. 1993년에는 25세에서 29세 여성 1천명 당 176.5명에서 2005년에 91.7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와는 다르게 30-34세의 모의 출산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3년 63.2명에서 2013년에는 111.4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35세에서 39세의 여성의 출산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과거와는 다르게 30세 미만의 출산율은 하락하고 그 이상의 연령층출산율은 증가하

고 있다 이는 출산의 주된 연령층이 고령화 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2.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 정책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저 출산 문제를 2004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였고, 2005년에 저 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 저 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제 1차 저 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2006년부터 2010년 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지속발전 기능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추진하였고, 2011년부터 2015년 까지 제 2차 저 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저 출산·고령사회에 성공적인 대응을 통한 활력 있는 선진 국가 도약’이라는 비전달성을 수립하였다.

지난 10여 년간 임신, 출산 지원을 강화하고 일과 가정 양립 제도 확충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제1차 기본계획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고운 맘 카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 양육수당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고, 2차 기본계획 시기에는 보육료 대상을 확대(소득하위 70%) 하고 육아휴직급여 정률제(40%), 0-2세 무상보육, 5세 누리과정, 2013년에는 무상보육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경제난과 청장년층의 실업률과 취업난, 비혼과 만혼의 증가 등으로 초 저출산현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2)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는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명칭으로 일컬어지는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등을 개별적으로 시행하여 자치구의 주민들의 출산율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출산금의 지급은 지자체 별로 지급하는 방식, 출생순위별 지급 여부 및 금액이 각자 상이하기 때문에 일관된 효과를 파악하기는 그리 용이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은 첫째부터 모든 자녀에게 지급하는 지역, 둘째 이상 출산했을 경우 지급하는 지역, 셋째 이상부터 지급하는 지역으로 나뉘어 그 방식의 차이가 있고, 지역별로 출산금의 액수도 차이가 극명하게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각 지역구마다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1인당 지원받는 평균 금액이 최대 48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자치구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의 6년간 출산장려금 지원액은 강남구 99억5000만원, 서초구 72억3000만원, 중랑구 49억4000만원, 송파구 48억4000만원, 양천구 38억5000만원 순이었다. 이에 비해 가장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지역은 강서구로 3억6000만원 이었으며 중구 9억3000만원, 종로구 13억2000만원, 동작구 13억2000원, 광진구 13억3000만원 순이다. 즉, 최대치(강남구)와 최저치(강서구)의 차이가 95억 9000만원으로 약 27배에 달한다.

실질적인 1인당 평균 지원금으로 구분했을 경우, 중랑구가 6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종로구 59만원, 강남구 53만원, 금천구 46만원, 양천구 45만원 순이며, 가장 적게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은 마포구 13만원, 노원구 15만원, 서대문구 16만원, 동작구 17만원 순이었다. 2)

지원 금액도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의 경우에는 첫째 출산시 1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 둘째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분포가 다양하며 셋째의 경우 종로구, 중구, 중랑구, 서초구, 강남구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중구와 강남구는 넷째 출산시 300만원, 광진구와 마포구는 다섯째 출산시 5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한편, 지난 5년간의 각 자치구의 출산율을 비교해보면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곳은 구로구로 1.18명 이었으며 뒤를 이어 노원구와

2) 각 자치구마다 출산장려금 지원액이 다른 것은 출산율의 차이도 있지만 각 구마다 거주 요건, 지원 금액 등도 다르기 때문이다. 거주 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부터 3개월, 6개월, 12개월 이상 등 각 구마다 다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강서구 1.1명, 영등포구 1.07명, 성동구와 강동구 1.06명 순으로 높았다. 강남구는 0.86명으로 서울시 평균인 1.01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비해 지방에서는 서울, 경기보다 더 많은 출산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인 전남 해남군은 2008년에 신설한 ‘저출산전담팀’을 통해 2012년부터 효과를 보기 시작해 현재는 전국 합계출산율(2015년 기준 1.24)에 거의 2배에 육박하는 2.46을 기록할 정도로 출산장려금으로 인한 효과를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효과 이면에는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해당 지역으로 옮겨놓아 혜택만 받아가는 소수도 있으며, 지난 해 기준으로 전국 군단위 기초지자체에서 최하위권의 재정자립도(6.4%)를 기록한 해남에서 연마다 40억원 이상의 출산관련 예산 투입이 적절한지는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결국 대부분의 출산율 증대를 위한 정책은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포괄하는 비용의 부담을 줄여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기본 골자이다. 이 비용에서는 직접적으로 드는 직접 비용과 산모의 경력 단절에 따른 간접, 기회비용을 포함한다. 출산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모두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지자체의 충분한 지원없이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

출산장려금 정책은 이 같은 취지에서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로 시행해온 대표적 저출산 대책중 하나이다. 대다수의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지원은 출산시 일시불로 현금 지급을 하는 형태이지만, 지자체별로 지급 규모의 편차가 매우 크다.

3. 출산장려금정책 매커니즘

한국 사회의 가족 문제가 점점 심각한 위기에 처하면서 출산장려정책은 선거의 주요 쟁점사항 중 하나로 언제나 등장하고 있다. 199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게리 베커는 한국의 저출산율과 이로 인해 점점 늘어

나는 사교육비 지출 증대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바라보았다. 베커는 모든 인간은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출산 역시 경제적 계산에 의한 결과로 인식한다. 그가 인식하는 가족은 재화와 시간을 사용해서 생존에 필요한 기본재를 생산하는 공장과 마찬가지로이다. 따라서 자녀를 얼마나 가질 것인지, 자녀에게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인지를 문제를 비용 편익의 관점에서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출산을 저하에 또 다른 원인으로서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 증가와도 관련이 깊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여성의 경제력 또한 커졌지만, 출산은 여성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과거에 비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성이 과거처럼 불행한 결혼생활을 참으며 많은 자녀를 출산하려는 동기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출산장려금 정책의 기본 골조는 출산 시 축하의 개념으로 경제적인 인센티브인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즉, 출산을 했을 경우 편익을 제공하여 출산을 장려한다는 의도인데 정책효과는 여전히 미미한 상태이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경제학적 개념을 빌리자면,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고정비용을 가변비용화하라'는 개념을 역으로 풀어 '수요를 장려하기 위해 고정비용보다 가변비용에 대한 보조'를 해줘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바로 이 점이 출산장려금의 효과가 약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사실 가정에서는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일시적인 출산장려금 보다 향후 지불해야 할 비용의 보조나,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축을 더욱 선호하기 때문이다.

제 3 장 선행연구의 검토

1. 해외 선행연구

해외의 출산장려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캐나다의 Allowance for newborn children(ANC) 프로그램과 호주의 Baby bonus 프로그램이 있다. 먼저, Milligan(2005)이 1991년부터 1996년 사이의 기간 동안 캐나다 퀘벡 정부에서 셋째 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ANC 정책프로그램을 이중차분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가구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하였다. Kim(2001) 역시 ANC 프로그램이 여성의 생애에 걸친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출산율을 높이는 작용은 하였지만 이것이 수혜기간동안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기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줬다.

다음으로 호주의 Baby bonus에 관한 연구는 Drago et al(2009)가 호주의 가구패널자료인 HILDA(Household Income and Labor Dynamics in Australia)를 이용하여 분석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하였고, 특히 둘째 자녀부터 효과가 높다고 밝혔다.

Gauthier and Hatzius(1997)은 1970년~1990년 기간 동안 22개의 OECD 국가를 대상으로, Addio and Ercole(2005)은 1980년 ~1999년 기간 동안 16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가족수당 같은 현금지원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위와는 반대로, Kalwij(2010)은 1980년~2003년의 기간 동안 서유럽 16개국 대상으로 2004년 European Socila Survey (ESS) 2004년 자료를 이용하여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에 효과가 없다는 것과 동시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기회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출산장려정책이 긍정영향 혹은 부정영향이 아닌 자녀의 출산 순위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 Vikat(2004)는 핀란드의

1998년~2000년 자료를 생존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출산장려금이 셋째 자녀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다. 1971년 ~1986년까지 영국을 대상으로 연구한 Erimisch(1998) 출산장려정책이 셋째아이, 넷째아이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Lindo(2010)은 소득수준과 출산율의 인과관계로 보고 남편의 직업 변동이 출산율 감소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Jensen(2010)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 다시 말해서 여성이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수록 출산율은 낮아진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Wittington et al 1992; Kearny 2004)는 복지 개혁이나 세금의 감면과 같은 혜택이 출산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밝혔고 Chen(2011)은 프랑스에서의 세금 감면 혜택이 출산율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2. 국내 선행연구

우리나라의 출산장려금 정책 연구는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 2000년에 시작하여 아직 20년이 채 되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에 관한 연구 결과가 상반되어 정책 효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아직은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에서 연구된 출산장려금 정책은 다양한 분석방법을 통해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 국내에서 연구된 출산장려금 정책의 분석방법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계열분석방법을 사용한 연구로는 최상준·이명준(2011)과 이명석·김근세·김대건(2012)가 있다. 최상준·이명준(2011)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동안 16개의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유아 1인당 아동복지예산과 아동복지 공무원 수 그리고 보육시설개수를 통한 출산율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명석·김근세·김대건(2012)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230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합계출산율을 검증하였다. 이 두 연구는 시간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가 일치하지 않지만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같은 결론을 보여준다.

다음으로는 출산장려정책 효과를 검증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패널회귀분석이다. 출산장려 정책은 정책의 도입 전과 후의 출산율이나 추세의 차이 검증, 추세간의 상관관계분석, 횡단면 회귀분석등은 출산장려라는 정책 이외에 출산율에 미치는 변수를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출산장려정책과 출산율 간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출산장려정책 이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독립변수로 포함시키는 패널회귀분석이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효과적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연구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석환(2011)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230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출산율 효과와 출산장려정책의 인구유입효과를 분석하였고, 송헌재·김지영(2013)은 여성가족패널 2차 자료(2008년~2009년)와 지방자치단체별 출산장려금 현황을 이용하여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박창우·송헌재(2014)는 2005년부터 2010년의 기간 동안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총 출생아수,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을 검증하였다. 이석환(2014)은 2001년부터 2010년에 제주도를 제외한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출산율을 검증하고 뿐만 아니라 통제변수와 독립변수 사이의 출산기간의 1년이라는 시차를 부여하였다. 이미란(2009)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20-40대 전후의 미혼의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출산양육동기를 분석하였는데,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미혼의 여성을 대상으로 앞으로의 출산과 양육동기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서 미혼의 가임여성들이 국가에서 실천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고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검증되었고 정책이 앞으로의 출산과 양육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석호원(2011)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 25개의 자치구만을 대상으로 하여 합계출산율과 각 자치단체의 출생아수와 연령별 출산율을 분석하였다. 위의 연구들 역시 같은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분석단위나 변수의 사용이 달라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줬다. 이석환(2011)과 송헌재·김지영(2013), 박창우·송헌재(2014), 이석환(2014)의 경우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미란(2009)과 석호원(2011)은 경우는 정책의 효과가 없는 것을 검증하였다.

다음은 단순비교분석을 통한 연구 분석이다. 최정미(2011)은 2010년에 전국 232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구를 대상으로 전체인구, 가입여성인구, 출생아 인구로 나뉘어 분석하였다. 허만형·이정철(2011)은 전국 230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2008년 6월 도입 후 최소 3년이 지난 164개의 기초자치단체를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을 분석하였다. 특히, 허만형·이정철(2011)은 정책이 도입된 이후 적어도 4년 이상이 지나야 효과를 나타낸다고 주장하였고 이 두 연구는 출산율과 인구라는 종속변수의 차이와 시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일치한다.

가장 최근에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에 대해 연구한 홍석철·김영일·임재영·여미영(2016)은 출산장려금 정책이 국내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2005~2011년 자료를 이용해 지자체 간 출산장려금의 편차가 출산율의 차이를 설명하는지를 분석했다. 역인과성과 다양한 교란요인을 통제한 뒤 출산장려금 지원이 컸던 지자체일수록 출산율이 유의하게 높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출산장려금 정책의 영향으로 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생아 수는 첫째 아이 3만 2038명, 둘째 아이 4041명, 셋째 아이 763명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 출생한 총 신생아 수의 각각 2.35%, 0.4%, 0.35%에 해당한다. 더 흥미로운

결과는 첫째 아이 한 명을 낳기 위해 요구되는 출산장려금은 약 127만원, 둘째 아이는 3500만원, 셋째 아이는 1억7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출산 장려금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식으로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다. 박창우·송헌재 (2014), 최준욱·송헌재 (2010), 이명석·김근세·김대건(2012)는 출산순위별 첫째 출생아부터 다섯째 출생아까지의 출산장려금과 출산순위를 고려한 가중평균값을 산출하여 출산장려금 수준변수를 정의하였다.

[표3] 국내 선행 연구 정리

연구자(연도)	분석단위(연도)	분석방법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
최상준·이명석(2011)	16개광역자치단체(2001-2010)	시계열분석	합계출산율	-유아1인당 아동복지예산 -유아 1인당 공무원 수 -국공립유치원수	-여성경제참가율 -실업률 -자동차세 -농가가구비율 -GRDP
이석환(2011)	제주도 제외 230개 기초자치단체(2001-2009)	패널회귀분석	-출산율효과(조출율, 출생건수) -출산장려정책 인구유입효과(순이동률, 순이동자수)	-출산장려정책(출산장려조례제정여부를 나타내는 가변수) -첫째아~다섯째아이 장려금 합계	-인구밀도 비율 -노령인구 비율 -가임여성 비율 -조혼인율 -학력수준 -학교용지 -자가용등록대수 -지방세수입 -건축허가연면적
최정미(2011)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2010)	독립표본 t검정	인구(전체인구, 가임여성인구, 출생아 인구)	출산장려금	
허만형·이정철(2011)	전국 230개 중 2008년 6월 제도 도입하여, 최소 3년 지난 164개 기초자치 단체(2002-2008)	F검정과 t검정으로 분석	출산율	-출산장려금 수준 -출산장려금 지급방식 -출생순위 따른 지급 -출생아수 따른 지급방식	
이명석·김근세·김대건(2012)	230개 기초자치단체(2005-2009)	시계열 분석	지방자치단체 합계출산율	출산장려금의 가중평균을 이용	-조혼인율 -초혼연령 -가임여성 비율 -자동차세 -농촌인구 비율 -출산장려

					정책 -출산장려	정책수
송헌재·김지영 (2013)	-여성가족패널2차 (2008-2009) -지방자치단체별 출산장려금 예산현황	프로빗모형분석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의 출산의향	출산장려금		
박창우·송헌재 (2014)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 (2005-2010)	패널회귀분석	-총 출생아수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출산순위별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수준	-초혼연령 -가임여성 인구 or 여성비율 -조혼인율 -조이혼율	-보육시설 개수 -재산세 -자동차세 -GRDP
이석환(2014)	기초자치단체(2001-2010) 독립변수-통제변수 1년 시차 부여	회귀분석	출산율 (조출산율)	출산장려금 정책, 신생아 건강보험료정책은 도입 여부가변수, 도입연차 가변수, 도입경과 연수, 출생순위별 책정금액과 합, 출생순위별 지원여부, 순위별 책정금액	-조혼인율 -가임여성 비율 -교육수준 -1인당 -지방세	-건축허가 연면적 비율
석호원(2011)	서울25개 자치구 (2005-2009)	패널회귀분석	-합계출산율 -각 자치단체의 출생아수, 연령별 출산율	-출산장려금시행여부 -수혜범위 -예산크기 -지원금액크기	-타정책 -여성인구 비율, -노령화지수 -월평균소득 -대학진학율 -교육보조금 -재정만족도 -조이혼율	-조혼이혼율 -가사분담 비율 -보육시설 개수 -가정생활 만족도

3. 선행연구 정리와 한계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는 일관된 연구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해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불일치는 연구에 사용되는 대상, 변수의 측정, 분석단위, 분석방법 등에 의한 차이로 기인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자료 부족으로 인해 정확한 연구결과를 분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국내의 기존 선행연구에서 출산 장려금 효과에 대한 상반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 단위에서 오는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성에 관해 긍정적인 결론을 내린 연구는 다음과 같다. 최상준·이명석(2011)은 16개의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계열 분석을 통해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석환(2011), 이명석·김근세·김대건(2012), 박창우·송헌재(2014)는 전국 230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정미(2011)는 232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의 긍정적 효과를 주장하였다. 허만형·이정철(2011)의 경우에는 전국 230개의 기초자치단체중 2008년 도입 후, 최소 3년이 지난 164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대부분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한 경우이다.

이와는 다르게 신호영·방은령(2008)는 충남의 16개의 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고, 이미란(2009)는 서울에 거주하는 미혼여성을 분석단위로 설정하였다. 석호원(2011)역시 서울의 25개 자치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처럼 특정 지역이나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의 효과를 부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출산장려금 효과가 각 지역과 분석단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230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제주도와 시군구 통합으로 인한 누락 지자체를 제외한 179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04년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를 연구의 분석기간으로 설정함으로써 기존 선행연구의 시간적 범위 한계를 보완하였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에서 장기간의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연구한 경우 대부분은 출산장려금이 처음 채택된 시점인 2002년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출산장려금이 가장 활발히 채택된 2004년을 시작으로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이는 2002년의 경우에는 채택을 한 지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책효과를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정책이 가장 활발하게 채택된 2004년을 기준으로 하여 전국 지자체의 정책 효과를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론의 차이로 인한 상반된 연구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선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산장려금 제도의 효과를 인정하는 연구는 집단 간의 비교 분석이나 제도의 도입 전과 후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이와 반대로 출산장려금 영향을 부정하는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이나 패널 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각각의 연구에서 사용되는 통제변수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자료 한계라는 문제점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선행연구에서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증명된 통제변수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변수를 선정하여 연구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제 4 장 분석단위와 변수의 설정

1. 분석 단위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출산장려금의 지급이 출산(합계출산율, 연령별 출산율, 총 출생아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전국은 전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8개의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분석단위로서 연구기간 범위 내 자료 수집이 가능한 179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였다.

[표4]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	
서울(25)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경기(30)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평택, 동두천, 안산, 고양, 과천, 구리, 남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용인, 파주, 이천, 안성, 김포, 화성, 광주, 양주, 포천, 연천, 가평, 양평
인천(10)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 옹진군
대구(4)	중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
광주(3)	동구, 남구, 광산구
울산(3)	중구, 남구, 울주군
부산(1)	기장군
강원(13)	춘천, 원주,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평창,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양양
충북(9)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음성, 증평
충남(13)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전북(12)	전주,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전남(20)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경북(23)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경남(13)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산청

[표 5] 연구 대상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	
강원	강릉, 동해, 영월, 정선, 고성
충남	당진, 서천, 연기
전북	정읍, 완주
경남	창원, 마산, 진해
경기	여주
충북	청원, 진천, 단양
전남	담양, 화순
경남	하동, 함양, 거창, 합천
부산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대구	동구, 서구, 북구, 달서구
광주	서구, 북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군
울산	동구, 북구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연구범위 기간 내 자료수집이 가능한 179개의 자치구를 대상으로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panel data)을 실시하였다. 패널데이터(panel data)는 특정개체의 관측 값을 시간 순으로 기록해놓은 시계열데이터(time-series data)와 특정 시점에서 관측되는 여러 개체의 관측 값을 나타내는 횡단면 데이터(cross-sectional data)를 하나로 합쳐놓은 형식의 데이터로 동일한 관찰대상에 대해 반복적으로 측정된 데이터를 의미한다. 패널분석을 통한 반복적 관찰로 동적(dynamic)한 관계를 추정할 수 있으며 개체들 사이에서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시계열 혹은 횡단면 데이터에 비해 더 많은 정보와 변수의 변동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더욱 효율적인 추정량을 얻을 수 있고,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민인식, 최필선, 2009:2-3)

또한 지역적으로 세분화하여 해당 지역에 출산장려금이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기 위해 지역별로 연구 지역에 더미변수를 취하고, 합계출산율의 값에 가중치를 곱하여 연구 대상 지역과 비대상 지역의 차이가 극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 변수의 설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선정한 합계출산율³⁾(Total Fertility Rate : TFR), 총 출생아수, 연령별 출산율(Age-specific Fertility Rate: ASFR)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선정된 바 있는 출산장려금의 효과로 영향을

3) 여자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로 연령별 출산율(ASFR)의 총합이며,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받은 변수이다.

보통 출산을 나타내는 변수에는 조출생율, 일반출산율, 연령별 출산율, 합계출산율이 있는데 이 변수들은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⁴⁾, 당해 연도의 15세부터 49세까지의 여성인구, 그리고 당해 연령별 여성인구 등의 차이만 있는 변수로 모두 출생아수를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변수들이다. (박창우·송헌재 2014)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쓰인 합계출산율⁵⁾은 여성이 낳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 즉 기대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출산장려금 지급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총 출생아수, 연령별 출산율과 출생순위별 출산율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추가적인 종속변수로 선정된 변수인 출생아수, 연령별 출산율, 출생순위별 출산율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국가통계포털 (KOSIS)의 인구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의 범위 기간인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료를 수합하였다. 또한 미비된 자료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서 매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인구정책사례집’의 자료를 통해 보완하였다.

따라서 위의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접근방식에 추가로 출산순위별 총 출생아수와 연령별 출산율을 중점적으로 다룰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먼저, 출산순위별 출생아수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순위별 출산금과 출생아수를 매치하여 직접적인 효과를 알아 볼 것이다. 1아 출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산모가 1아를 출산하는 수치, 2아 출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산모가 2아를 출산하는 수치, 3아 출산금을 지급받을

4) 출생률과 사망률을 산출할 때 보통 그 해의 중간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것을 (인구)연앙인구라고 한다.

5)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

수 있는 산모가 3아를 출산하는 수치를 나누어 그 영향을 파악할 것이다.

다음으로 연령별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출산통계에 따르면 2011년에 첫 아이를 낳은 산모의 평균연령이 사상 처음으로 30세를 넘긴 이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최근 2015년에 32.2세를 기록했다. 모(母)의 연령별 출생아 구성비를 살펴보면 1995년에는 25~29세의 산모의 비율이 54.2%, 30~34세의 산모비율이 20.8%였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역으로 25~29세의 산모가 21.6%, 30~34세의 산모가 49.4%로 비중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따라서 약 93%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모 나이 25~39세를 중점적으로 파악하여 출산장려금의 지급이 해당 연령의 산모의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출산의 과정은 보통 10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독립변수, 통제변수)이 영향을 주는 시점은 약 1년 뒤임을 전제해야 한다. 예를 들면 2005년의 독립·통제변수가 2006년의 종속변수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시차를 두어 연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종속변수와 독립, 통제변수와의 시차를 1년으로 정하고 진행할 것이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중심이 되는 독립변수인 출산장려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지원금, 출산축하금, 출산양육지원금, 출생아 아동 양육비 등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는 산모에게 지급하는 일시적 현금지원과 양육비 차원의 분할적 현금지원을 일괄적인 출산장려금으로 규정할 것이다.

6) 2015년 통계청 출생통계

출산장려금의 현황은 본 연구의 연구 범위인 2004년부터 2012년까지의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을 파악하여 정리하였다. 해당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파악한 각 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정책 조례 제정과 개정을 통해 출산 현황을 조사하였다. 전체 지자체를 전수 조사해야 하지만, 자료 미비로 파악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 현황이 있었기 때문에 연구범위 기간 내에 필요한 독립변수가 누락된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부득이하게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 총 179개가 선정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제도 도입 여부를 중요한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자체에서 채택되기 시작한 때부터 점차 정책의 확산이 이루어져 연구 기간의 종료시점인 2012년에는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출산장려금 제도를 채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도입 여부가 출산율 증대에 미치는 영향 또한 파악할 것이다.

또한 출산순위별 출산장려금 또한 주요 독립변수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각기 다른 금액을 다른 방식을 통해 산모에게 지급하는데, 보통 지급되는 금액은 첫째<둘째<셋째 순으로 증가한다. 이러한 추세가 다자녀를 출산하는 산모에게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율 증대를 꾀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노력임에 비추어 볼 때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이 출산율 증대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

3) 통제변수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 선행연구에서 통제변수로 선정되었던 여

러 변수들을 인구통계학적 요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으로 나누어 조사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는 혼인수와 조혼인율, 조이혼율, 고령화율, 순인구이동율, 인구증가율, 주민등록수가 있다. 혼인수의 증가는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석환, 2014)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국내 혼인 건수가 현재까지 5년째 떨어지면서 ‘결혼 빙하기(氷河期)’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1월~9월 혼인이 20만 6천 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만 4250건(6.5%)가 감소했다. 혼인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출산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조혼인율 역시 출산율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석호원, 2011; 이명석·김근세·김대건, 2012)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 역시 2011년 6.6건에서 작년 5.9건으로 감소했고 2016년에는 더 떨어져서 사상 최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비율의 경우는 인구의 고령화 비율이 높을수록 출산가능한 여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출생아수에 부정적인 영향(이석환, 2011; 석호원, 2011)을 미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적 요인으로는 1인당 자동차수와 지자체의 복지비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면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단위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적 소득등과 같은 변수를 살펴보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대신할 변수로 1인당 자동차수와 지자체의 복지비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지역의 면적을 경제적 요인으로 대신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1인당 자동차 수의 경우는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이석환, 2011)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지자체의 복지비율과 재정자립도, 재정자

주도는 출산과 관련된 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로 인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도시화율, 유치원 수, 보육시설비율을 사회학적 요인으로 분
류하였다. 위의 요인들 역시 정책 효과를 나눠서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도시화의 경우는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유치원
수, 보육시설 비율은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초등학교 수와 보육시설의 높은 비율은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하는 데
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해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또한, 사회에 다시 재진입하는 여성일지라도 출산 후 아이 양
육에 대한 부담이 실제 출산 보다 더 많은 부담의 원인으로 여겨지기 때
문에 만족스러운 양육환경이 여성의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라고 예상된다. 앞에서 밝힌 것과 같이 통제변수 역시 임신과 출산까지
의 1년간의 기간을 고려하여 1년 전의 후행변수를 적용한다.

3. 가설 설정

**연구가설 1 : 출산장려금과 합계출산율 간에는 양의 관계가 있을 것
이다.**

연구가설 1을 통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이 합계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가설을 설정한 이
유는 2015년 기준으로 전국 최고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전라남도 해남군
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중의 하나
이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의 액수와 합계출산율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이명석·김근세·김
대건(2012), 박창우·송헌재(2014), 석호원(2011)이 출산장려금이 합계출산
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바 있다.

연구가설 2 : 출산장려금과 총 출생아수 간에는 양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동향조사(2014년)의 출생통계 확정치를 보면 1000명당 출생아 수가 8.6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총 출생아수도 435,400명으로 두 번째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출산장려 정책과 출산장려금의 궁극적인 목적은 출생아수를 늘리는 것이다. 따라서 출산장려 정책을 통해 총 출생아수를 늘리고자 노력하는 바 출산장려금 정책이 총 출생아수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연구가설 3 : 출산장려금과 주 출산 연령층(25-39세)의 출산율 간에는 양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혜택을 받는 대상의 대부분은 주요 출산층인 25-39세로 2015년 기준으로 전체 비율에서 약 92%를 차지한다. 따라서 출산 산모의 주 연령층이 25~39세임을 바탕으로 출산장려금이 해당 연령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검증할 것이다.

연령별 출산율을 연구한 기존 연구(석호원, 2011)에서는 연령별 출산율에 출산장려금이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

연구가설 4 : 출산장려금과 출생순위별 출생아수 간에는 양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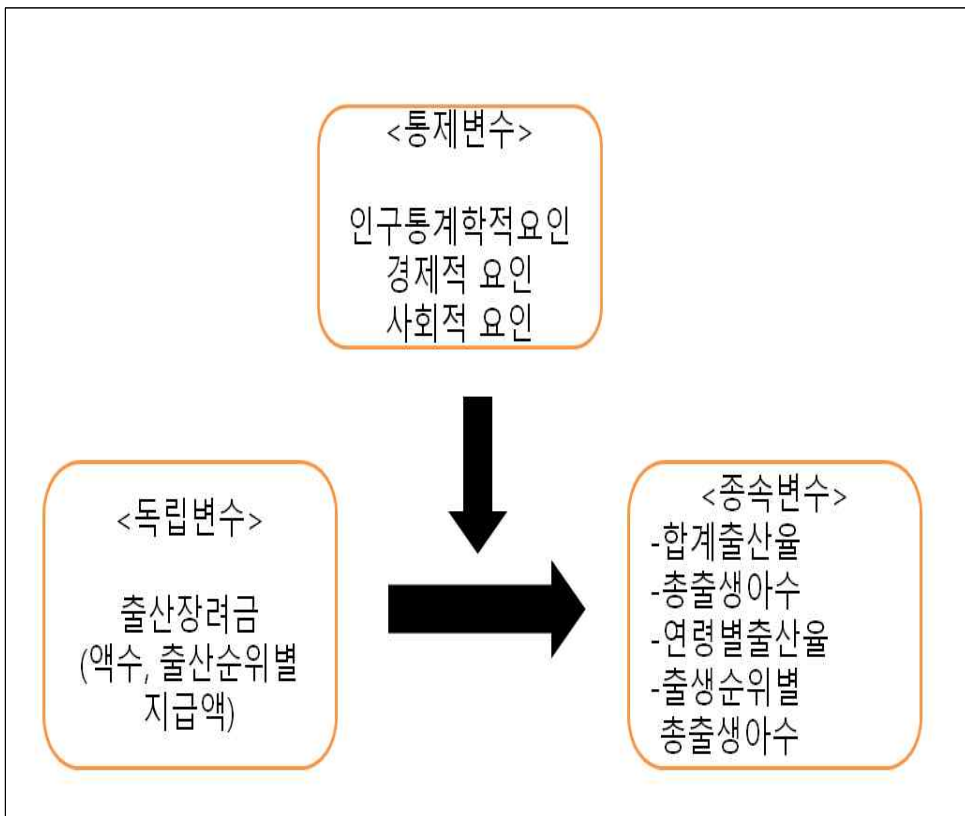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의 현황을 보면 첫째 아이보다는 둘째아이, 둘째 아이보다는 셋째 아이에게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다자녀가구로 갈수록 더 많은 출산장려금의 혜택을 받게 하여 출산율을 높이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도대로 현행 지급추세가 실제로 해당 지역의 출생

순위별 출생아수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4. 분석모형

아래의 그림은 본 연구의 분석틀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연구의 분석틀



제 5 장 분석 결과

1. 기초통계를 통한 비교 분석

1) 전국 출산장려금 기초 통계

[표 6] 전국 출산장려금 기초 통계

변수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인당자동차수	0.364088	0.069481	0.2	0.88
혼인수	1390.939	1479.193	45	8615
고령화율	15.58453	7.591272	4.06	35.68
면적	454.5409	378.1508	7	1820
도시화	3883.055	6653.633	19.40284	29626.47
순인구이동	317.8603	6045.045	-23923	72032
인구증가율	0.350259	2.459461	-10.83	23.95
복지예산비율	21.39174	11.56604	2.25	149.84
재정자립도	29.20782	17.57328	6.4	92.7
재정자주도	67.1712	9.337382	32	93.9
전출인구	37016.1	39811.53	1156	231079
주민등록자수	217903.9	213092.8	9191	1174228
유치원수	37.37735	28.10465	5	188
조이혼율	2.324225	0.475473	1	5
조혼인율	5.785373	1.255847	2.8	10.4512
전체 출산금	170.3545	284.7819	0	2220
시행여부	0.604368	0.48911	0	1
보육시설비율	13.88117	4.632861	2.88	34.3
총출생아수	2035.804	2174.489	46	12667
합계출산율	1.308798	0.257865	0.712	2.47
관측치 : 1969				

2) 전국 연령별 출산율

연구의 대상인 전국의 연령별 출산율의 기초통계는 아래와 같다.

[표 7] 전국 연령별 출산율

변수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5-19세 출산율	2.631742	1.794459	0	13
20-24세 출산율	23.89721	11.50325	0	73.4
25-29세 출산율	94.76135	28.89077	27.7	194.4
30-34세 출산율	104.0762	21.83167	54.1	217.4
35-39세 출산율	30.85597	10.05836	12.4	65
40-44세 출산율	4.302793	1.991095	0	16.1
45-49세 출산율	0.215541	0.311944	0	2.9

표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출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25세에서 39세이다. 그 중에서도 30-34세가 가장 많은 출산을 하고 있는 연령대이다. 앞서 살펴 본 것과 비교해봤을 때,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이 30대 중 후반으로 고령화 되고 있는 추세와 일치한다. 이는 만혼과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이나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인해 여성의 출산이 늦어지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3) 전국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지역(전국)을 대상으로 출생순위별 출생아에 따른 출산장려금의 기초통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8] 전국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수

변수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아출산금	15.66836	42.99307	0	500
2아출산금	39.92483	77.98974	0	600
3아출산금	114.7613	189.6486	0	1200
1아출생수	1050.856	1160.814	22	6840
2아출생수	773.3911	827.7669	18	5046
3아출생수	200.6506	194.1722	3	1061

먼저 전국 수준에서 지급하는 첫째아이의 평균 출산장려금은 15만 6천 원이며 가장 적은 금액은 출산장려금을 도입하지 않았거나, 첫째에게 지급하지 않는 곳으로 최솟값인 0원을 가진다. 전국에서 첫째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곳은 2012년의 전라남도 나주이며 금액은 500만원이다.

둘째아이의 평균 출산장려금은 첫째 출산장려금보다 늘어난 39만원이며 둘째아이 역시 최소금액은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둘째에게도 지급하지 않는 지역으로 0원이다. 둘째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급을 최대로 하는 지역은 2007~12년의 경북 봉화군, 경북 울진군으로 600만원이다.

마지막으로 셋째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액은 평균 114만원으로 첫째 아이에는 약 7.6배 둘째 아이에 비해서는 약 3배로 높은 금액이다. 최대 금액 역시 1천 2백만원으로 첫째, 둘째 아이의 500만원에서 600만원과 비교했을 때 약 2배 정도의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나타난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전체 지역의 기초통계를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금액은 첫째 < 둘째 < 셋째 순임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출산장려금액 정책의 흐름이 다자녀를 출산을 하는 가정에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짐을 알 수 있다.

4) 지역별 출산장려금 기초통계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인 범위의 기초통계 이외에도 지역별로 나눈 기초통계를 통해 해당지역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여 세부적인 지역적 특색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서울

[표 9] 서울 출산장려금 기초통계

변수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인당자동차수	0.292109	0.065546	0.2	0.54
혼인수	2840.284	932.3797	840	5195
고령화율	9.625855	2.288451	5.53	15.53
면적	24.27636	9.152599	10	47
도시화	17743.9	5119.785	6541.375	29626.47
순인구이동	-2974.59	5769.695	-21778	40828
인구증가율	0.008255	1.409606	-5.54	7.28
복지예산비율	32.94593	10.93308	12.54	59.19
재정자립도	47.78036	17.88595	19	92.7
재정자주도	75.556	10.75041	48.3	93.9
전출인구	75754.8	26683.64	3458	137701
주민등록자수	407737.9	126842.1	128065	685279
유치원수	35.29091	13.36854	10	79
조이혼율	2.3	0.388334	1.4	3.3
조혼인율	6.999866	0.888631	5.1	9.397397
전체출산금	55.18182	72.16265	0	600
시행여부	0.589091	0.492896	0	1
보육시설비율	13.62335	3.590327	7.51	24.17
총출생아수	3680.316	1277.586	873	6859
합계출산율	0.994869	0.093086	0.712	1.258
관측치 : 275				

(1-1) 서울 연령별 출산율

서울의 25개의 자치구의 11년간의 연령별 출산율 평균은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은 출산율 하는 연령대는 30-34세로 나타나며, 최소 68.5명 최대 125.4명명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약 2배 이상의 출산율을 보인다. 앞서 말한 대로 모(母)의 출산 연령이 과거와는 다르게 30대 중후반으로 이동한다는 통계청 자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10] 서울 연령별 출산율

변수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5-19출산율	1.285455	0.664265	0	3.3
20-24출산율	8.884	2.710139	3.1	16.6
25-29출산율	56.59782	14.04153	27.7	105.6
30-34출산율	95.84655	11.04076	68.2	125.4
35-39출산율	32.89418	8.780418	17	53
40-44출산율	4.091273	1.420932	1.7	8.6
45-49출산율	0.158546	0.116635	0	0.8
관측치 : 275				

(1-2) 서울 출생순위별 출산율

서울의 출생순위별 출산금에 따른 출산율은 첫째아이 1만 4천원에서 셋째아이 38만 3천원으로 그 차이가 크다. 이에 따른 출생수를 살펴보면 첫째아이와 셋째아이의 평균이 약 8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위에서 밝힌 것처럼 셋째 아이를 출산하는 가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셋째아이에 대한 지원 금액을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서울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수

변수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아 출산금	1.454545	4.321978	0	20
2아 출산금	15.4	19.6229	0	100
3아 출산금	38.32727	55.04579	0	500
1아 출생수	2100.236	751.7147	504	4057
2아 출생수	1304.298	455.6266	308	2576
3아 출생수	255.1491	83.81403	58	455

(2) 경기 기초통계

[표 12] 경기 출산장려금 기초통계

변수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인당자동차수	0.364212	0.062298	0.24	0.56
혼인수	2528.782	2083.532	220	8615
고령화율	9.725667	3.543451	4.72	21.8
면적	318.0394	278.6566	33	878
도시화	3337.129	3867.791	65.05931	16513.28
순인구이동	3736.885	11163.99	-23923	72032
인구증가율	1.990212	3.170997	-10.83	20.08
복지예산비율	21.52891	8.118033	5.97	44.26
재정자립도	47.13727	13.13355	15.3	74
재정자주도	72.64121	7.91164	48.3	93.7
전출인구	66670.2	56048.3	3853	231079
주민등록자수	379247.8	301316.8	44900	1174228
유치원수	63.26061	42.22805	6	188
조이혼율	2.649091	0.555012	1.1	5
조혼인율	6.499232	0.953432	3.953671	10.08058
전체출산금	85.42424	128.1264	0	800
시행여부	0.612121	0.488007	0	1
보육시설비율	16.62452	5.254365	6.62	31.36
총출생아수	3880.982	3094.952	333	12667
합계출산율	1.308973	0.162961	0.959	1.922
관측치 : 330				

(2-1) 경기 연령별 출산율

경기도의 연령별 출산율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수도권 지역인 서울과 비교 하였을 때 다른 연령대에서는 서울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지만 25-29세 연령대 출산율이 1.7배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5-29세 연령대 출산율이 서울의 경우 모든 지역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도가 수도권 지역임을 고려해 봤을 때 높은 편임을 알 수 있

다. 게다가 총 출생아수가 서울과 비슷하다는 기초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둘 지역의 차이점을 찾아본다면 서울에 비해 경기지역이 출산금을 1.5배 이상 더 많이 지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경기 연령별 출산율

변수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5-19세 출산율	2.061212	1.102144	0	6.1
20-24세 출산율	22.03333	10.42469	2.7	47.4
25-29세 출산율	96.33818	24.25428	37.2	165.5
30-34세 출산율	105.7012	16.8746	61.9	155.2
35-39세 출산율	31.14818	9.258244	14.2	61.6
40-44세 출산율	4.22697	1.471027	1.4	10.4
45-49세 출산율	0.232121	0.211087	0	1.4

(2-2) 경기 출생순위별 출산금

경기지역의 출생순위별 출산금 역시 셋째아이에 대한 지원이 가장 높으며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비해 출생아수의 대부분은 첫째아이와 둘째아이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지역과 비슷한 양상이다.

[표 14] 경기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수

변수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아 출산금	0.454546	3.731822	0	50
2아 출산금	14.60606	36.4078	0	300
3아 출산금	70.36364	104.024	0	700
1아 출생수	1975.936	1642.438	145	6840
2아 출생수	1510.712	1188.239	124	5046
3아 출생수	373.603	269.6646	38	1061

(3) 충청 기초통계

[표 15] 충청 출산장려금 기초통계

변수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인당자동차수	0.386653	0.045292	0.29	0.52
혼인수	850.6736	1122.66	122	4490
고령화율	17.79723	6.359939	6.22	30.94
면적	574.0124	242.0164	61	984
도시화	411.2983	882.9847	43.42756	5434.778
순인구이동	510.3306	3556.174	-8248	41683
인구증가율	0.298926	2.545551	-6.19	23.95
복지예산비율	16.83868	5.998832	5.08	39.4
재정자립도	22.07314	11.06392	8.4	55.6
재정자주도	66.13554	5.446326	50.2	84.1
전출인구	21281.22	28903.65	2596	123097
주민등록자수	139538.4	159709.8	30483	831521
유치원수	31.44215	24.03573	5	108
조이혼율	2.277273	0.344278	1.3	3.1
조혼인율	5.430295	1.140064	3.4	9.472211
전체출산금	152.3554	159.0005	0	1080
시행여부	0.677686	0.468331	0	1
보육시설비율	13.47107	4.138143	5.69	24.96
총출생아수	1306.541	1843.281	131	8252
합계출산율	1.365661	0.16625	0.921	1.83
관측치 : 242				

(3-1) 충청 연령별 출산율

[표 16] 충청 연령별 기초통계

변수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5-19세 출산율	3.266942	1.887429	0	13
20-24세 출산율	29.51694	8.309026	9.3	54.9
25-29세 출산율	105.7847	21.73935	46.6	169.8
30-34세 출산율	99.31405	18.57979	54.1	147
35-39세 출산율	28.66322	8.320814	13.1	62.4
40-44세 출산율	4.263223	1.619491	0.7	9.5
45-49세 출산율	0.22438	0.267198	0	1.4

(3-2) 충청 출생순위별 출산율

충청도의 경우 서울, 경기와 같은 수도권에 비해서는 첫째, 둘째 아이에 대한 출산금이 더 높다. 보통 수도권의 경우에는 첫째아이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는 지역의 많은데 충청도의 경우는 첫째아이부터 지원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17] 충청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수

변수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아 출산금	17.89256	21.7707	0	120
2아 출산금	41.19835	45.428	0	240
3아 출산금	93.26446	108.5116	0	720
1아 출생수	634.5909	934.9094	55	4113
2아 출생수	502.4793	707.6534	48	3141
3아 출생수	163.595	197.7076	17	988

(4) 경상 기초통계

[표 18] 경상 출산장려금 기초통계

변수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인당 자동차수	0.390227	0.064719	0.24	0.74
혼인수	762.0884	860.0386	45	3342
고령화율	19.9346	7.791286	5.38	35.27
면적	711.9167	326.0923	73	1522
도시화	216.3358	231.8298	22.32761	1138.747
순인구이동	178.1515	2350.576	-6428	17183
인구증가율	-0.13061	1.882246	-7.7	8.37
복지예산비율	15.72543	5.670438	2.86	33.2
재정자립도	20.85379	10.92527	7.4	64.1
재정자주도	67.05025	4.804004	48.3	83
전출인구	17614.16	18988.17	1156	76316
주민등록자수	128997.3	128600.2	9191	527240
유치원수	31.39394	21.89171	6	115
조이혼율	2.117172	0.411983	1.1	4.2
조혼인율	5.258197	1.355299	2.8	10.4512
전체출산금	285.6591	411.4154	0	2220
시행여부	0.626263	0.484407	0	1
보육시설비율	14.13232	5.214769	2.96	34.3
총출생아수	1172.043	1400.332	46	5800
합계출산율	1.338654	0.206539	0.796	2.016
관측치 : 396				

(4-1) 경상 연령별 출산율

[표 19] 경상 연령별 출산율

변수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5-19세 출산율	3.001263	1.955213	0	11.3
20-24세 출산율	25.99798	8.185612	0	54.9
25-29세 출산율	97.67045	22.25356	44.3	184.1
30-34세 출산율	106.2947	24.12437	57.2	178.7
35-39세 출산율	29.24621	10.605	12.4	64
40-44세 출산율	3.876515	1.998184	0	14.2
45-49세 출산율	0.188131	0.345438	0	2.4

(4-2) 경상 출생순위별 출산율

[표 20] 경상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수

변수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아출산금	33.60859	70.16152	0	420
2아출산금	76.14141	129.1549	0	600
3아출산금	175.9091	241.5366	0	1200
1아출생수	582.1136	710.9179	22	2891
2아출생수	459.8838	553.6089	18	2286
3아출생수	125.0783	135.076	3	662

(5) 전라 기초통계

[표 21] 전라 출산장려금 기초통계

변수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인당자동차수	0.361335	0.065959	0.23	0.88
혼인수	578.9602	734.3782	73	3765
고령화율	22.23386	6.884166	7.46	35.68
면적	546.7443	177.7634	48	1013
도시화	400.8263	974.9417	33.55387	5062.25
순인구이동	-630.082	1450.957	-6033	5823
인구증가율	-0.75213	2.054751	-10.33	11.26
복지예산비율	16.18219	9.446657	4.36	149.84
재정자립도	15.30909	8.754026	6.4	49.4
재정자주도	61.45398	5.008271	46.7	81.2
전출인구	17127.96	23608.21	2128	130056
주민등록자수	108554.6	127433	23191	652877
유치원수	30.65909	23.89883	6	119
조이혼율	2.097727	0.340931	1	3.3
조혼인율	4.904837	0.817548	2.9	7.351136
전체출산금	271.7528	372.2505	0	1500
시행여부	0.607955	0.488902	0	1
보육시설비율	12.30759	4.225342	4.95	24.88
총출생아수	916.233	1181.337	138	6165
합계출산율	1.522585	0.27653	1.025	2.47
관측치 : 352				

(2-1) 전라 연령별 출산율

전라도의 경우 모든 지역을 비교 하였을 때 주요 출산층인 25-39세 연령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이는 적은 인구에 비해 상당히 많은 출산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을 특성이 출산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

치게 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전라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출산율 향상을 위해 출산과 양육을 위한 환경 조성에 많은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지역이다.

[표 22] 전라 연령별 기초통계

변수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5-19세 출산율	3.81733	1.949654	0	10.3
20-24세 출산율	32.77813	9.260239	13.1	61
25-29세 출산율	111.1332	24.17033	53.1	184.8
30-34세 출산율	114.1872	28.35306	55.2	217.4
35-39세 출산율	34.44176	11.59013	13.5	65
40-44세 출산율	5.373864	2.670499	0	16.1
45-49세 출산율	0.293466	0.446241	0	2.9

(2-2) 전라 출생순위별 출산율

앞에서 밝힌 것처럼 전라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역이다. 첫째 아이의 경우도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아이는 최대 1천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게다가 첫째아이와 셋째아이의 출생 수의 평균차이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 전라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수

변수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아 출산금	30.6108	55.53915	0	500
2아 출산금	56.55398	84.42952	0	500
3아 출산금	184.5881	269.4397	0	1200
1아 출생수	418.483	559.0988	47	3028
2아 출생수	351.6506	462.339	48	2446
3아 출생수	140.8864	155.5458	25	855

(6) 강원 기초통계

[표 24] 강원 출산장려금 기초통계

변수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인당자동차수	0.387552	0.045226	0.3	0.52
혼인수	468.3427	512.3766	113	1930
고령화율	16.09098	3.538184	9.15	24.58
면적	961.3986	474.2402	105	1820
도시화	147.8125	213.8227	19.40284	837.4572
순인구이동	129.7622	1071.412	-1348	4540
인구증가율	0.076573	1.404881	-2.25	8.2
복지예산비율	14.74224	5.889174	2.25	32.56
재정자립도	18.98112	7.109753	10	37.9
재정자주도	69.78881	5.366879	51.9	81.7
전출인구	14221.92	16770.13	3124	61017
주민등록자수	84194.36	89069.41	21269	327292
유치원수	25.58741	14.27266	9	70
조이혼율	2.447552	0.356594	1.6	3.9
조혼인율	5.61397	0.868418	3.8	8.393286
전체출산금	153.0909	206.0705	0	800
시행여부	0.531469	0.500763	0	1
보육시설비율	13.34441	4.29601	5.06	26.71
총출생아수	701.5594	798.4474	128	3098
합계출산율	1.395357	0.259465	1.048	2.075
관측치 : 143				

(6-1) 강원 연령별 출산율

타 지역의 경우 가장 많은 출산율을 보이는 연령대는 30-34세이다. 하지만 강원도의 경우는 25-29세가 가장 많은 출산을 하는 연령대로 다른 지역에 비해 출산층의 나이가 좀 더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표 25] 강원 연령별 기초통계

변수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5-19세 출산율	2.623077	1.79713	0	8.7
20-24세 출산율	29.31888	13.08226	12	73.4
25-29세 출산율	112.1895	31.08054	51.2	194.4
30-34세 출산율	100.5	18.51789	63.1	142.3
35-39세 출산율	28.82308	7.903687	14.7	62.5
40-44세 출산율	4.422378	1.999134	1.3	12.6
45-49세 출산율	0.209091	0.373018	0	1.8

(6-2) 강원 출생순위별 출산율

[표 26] 강원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수

변수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아출산금	6.237762	17.51054	0	100
2아출산금	37.41259	53.18998	0	300
3아출산금	109.4406	158.0193	0	720
1아출생수	338.5245	395.528	60	1601
2아출생수	273.1538	313.0029	46	1195
3아출생수	85.96503	87.11474	12	368

2. 전국 출산장려금, 합계출산율, 총 출생아수 기초통계

전국과 각 지역의 전체 출산금, 합계출산율, 총 출생아수 평균은 아래 표와 같다. 전국 평균 전체 출산금은 170만원이며, 경상도가 285만원, 전라도가 271만원으로 액수가 많은 편에 속한다. 이와 반대로 서울과 경기도가 55만원 85만원으로 작은 편에 속한다. 이는 서울과 경기도와 같은 수도권의 인구 밀집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예산과 상대적으로 많은 출산가정에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합계출산율의 경우 전국 평균은 1.3명이다. 가장 높은 곳은 전라도로 1.5명이고 가장 낮은 곳은 0.99명인 서울이다. 위에서 밝힌 것처럼 경상도와 전라도의 경우 전체 출산금액수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전라도의 경우 출산금액이 비슷한 경상도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다.

총 출생아수의 경우에는 서울, 경기도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총 출생아의 수만으로는 타 지역과의 출산율을 비교하는 변수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27] 전국 출산장려금, 합계출산율, 총 출생아수 기초통계 비교

	전국	서울	경기	충청	경상	전라	강원
전체 출산금 (만원)	170.35	55.18	85.42	152.35	285.65	271.75	153.09
합계 출산율	1.30	0.99	1.30	1.36	1.33	1.52	1.39
총 출생아수 (명)	2035.8	3680.3	3880.98	1306.54	1172.04	916.23	701.55

3. 전국 연령별 출산율 기초통계

전국의 모(母)의 연령별출산율은 아래와 같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25세에서 39세까지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30-34세가 주요 출산층임을 알 수 있다. 과거 20대가 주류를 이루던 모(母)의 출산 연령이 30대로 접어들었다는 통계청 자료와 일치한다. 이는 만혼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등으로 여성의 출산 나이가 늦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의 경우 주요 출산층 중에 하나인 20-24세, 25-30세의 출산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타 지역에 비해 서울의 주요 출산층이 가장 고령화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8] 전국 연령별 출산율 기초통계 비교

지역 출산율	전국	서울	경기	충청	경상	전라	강원
15-19세	2.63	1.28	2.06	3.26	3.00	3.81	2.62
20-24세	23.89	8.88	22.03	29.51	25.99	32.77	29.31
25-30세	94.76	56.59	96.33	105.78	97.67	111.13	112.18
31-34세	104.07	95.84	105.70	99.31	106.29	114.18	100.50
35-39세	30.85	32.89	31.14	28.66	29.24	34.44	28.82
40-44세	4.30	4.09	4.22	4.26	3.87	5.37	4.42
45-49세	0.21	0.15	0.23	0.22	0.18	0.29	0.20

4. 전국 출생순위별 출산금 출생아수 기초통계

전국의 출생순위별 출산금액에 따른 출생아 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국 첫째아이의 평균 출산 금액은 15만원이며 서울과 경기도 각각 약 14만 5,000원, 45,000원으로 가장 적은 지역이다. 반면 경상도와 전라도는 각각 33만원, 30만원으로 가장 높은 지역에 속한다.

또한, 모든 지역의 출산금액은 첫째, 둘째 아이에 비해 셋째아이의 지원 금액이 월등히 높다. 그러나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첫째, 둘째아이의 출산이 출생아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첫째, 둘째 아이에 비해 출생수가 낮은 셋째아이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여 다자녀 가구를 만들기 위함 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상당한 금액의 계속된 지원에도 불구하고 셋째 아이의 출산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면 셋째 아이의 지원금액의 방향을 재고해 봐야 한다고 판단된다.

[표 29] 전국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수 기초통계비교

	전국	서울	경기	충청	경상	전라	강원
1아 출산금	15.66	1.45	0.45	17.89	33.60	30.61	6.23
2아 출산금	39.92	15.4	14.60	41.19	76.14	56.55	37.41
3아 출산금	114.76	38.32	70.36	93.26	175.90	184.58	109.44
1아 출생수	1050.85	2100.23	1975.93	634.59	582.11	418.48	338.52
2아 출생수	773.39	1304.2	1510.71	502.47	459.88	351.65	273.15
3아 출생수	200.65	255.14	373.60	163.59	125.07	140.88	85.96

5. 상관관계 분석

1) [표 30] 총출생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1.00									1: 합계출산율						15:보육시설비율		
2	0.41	1.00								2: 1인당자동차수						16:조혼인율		
3	-0.32	-0.28	1.00							3: 혼인수	9: 1인당 복지예산							
4	0.37	0.23	-0.69	1.00						4: 고령화율	10: 재정자립도							
5	0.38	0.38	-0.44	0.52	1.00					5: 면적	11: 재정자주도					17 : 전체출산금		
6	-0.54	-0.52	0.58	-0.48	-0.61	1.00				6: 도시화율	12: 인구이동율					18: 출산장려금		
7	0.19	0.20	0.12	-0.12	0.08	-0.22	1.00			7: 순인구이동율	13: 주민등록자수					시행여부		
8	0.14	0.18	0.27	-0.40	-0.15	-0.01	0.71	1.00		8: 인구증가율	14: 초등학교수							
9	-0.35	-0.22	0.51	-0.51	-0.53	0.60	-0.11	0.11	1.00									
10	-0.35	-0.04	0.73	-0.75	-0.50	0.48	0.18	0.38	0.33	1.00								
11	-0.28	-0.11	0.40	-0.42	-0.17	0.36	0.06	0.16	-0.12	0.66	1.00							
12	-0.38	-0.31	0.98	-0.68	-0.46	0.59	0.09	0.23	0.51	0.71	0.40	1.00						
13	-0.34	-0.28	0.98	-0.68	-0.42	0.56	0.11	0.25	0.54	0.70	0.35	0.98	1.00					
14	-0.27	-0.24	0.94	-0.69	-0.37	0.43	0.18	0.28	0.42	0.67	0.34	0.95	0.96	1.00				
15	0.01	0.23	0.22	-0.21	-0.06	0.02	0.08	0.17	0.38	0.16	-0.02	0.19	0.25	0.22	1.00			
16	-0.09	-0.12	0.60	-0.72	-0.44	0.46	0.14	0.43	0.35	0.66	0.44	0.52	0.50	0.47	0.10	1.00		
17	0.36	0.29	-0.29	0.49	0.26	-0.23	-0.03	-0.09	-0.13	-0.32	-0.21	-0.29	-0.28	-0.30	-0.02	-0.37	1.00	
18	0.23	0.32	-0.07	0.19	0.03	-0.07	-0.04	0.05	0.20	-0.06	-0.17	-0.11	-0.06	-0.14	0.33	-0.11	0.52	1.00

2) [표 31] 합계출산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1.00									1: 총출생아수			9: 1인당 복지예산			17: 전체출산금	
2	-0.24	1.00								2: 1인당자동차수			10: 재정자립도			18: 출산장려금	
3	0.99	-0.28	1.00							3: 혼인수			11: 재정자주도			시행여부	
4	-0.69	0.23	-0.69	1.00						4: 고령화율			12: 인구이동율				
5	-0.41	0.38	-0.44	0.52	1.00					5: 면적			13: 주민등록자수				
6	0.50	-0.52	0.58	-0.48	-0.61	1.00				6: 도시화율			14: 초등학교수				
7	0.18	0.20	0.12	-0.12	0.08	-0.22	1.00			7: 순인구이동율			15:보육시설비율				
8	0.31	0.18	0.27	-0.40	-0.15	-0.01	0.71	1.00		8: 인구증가율			16:조혼인율				
9	0.48	-0.22	0.51	-0.51	-0.53	0.60	-0.11	0.11	1.00								
10	0.71	-0.04	0.73	-0.75	-0.50	0.48	0.18	0.38	0.33	1.00							
11	0.36	-0.11	0.40	-0.42	-0.17	0.36	0.06	0.16	-0.12	0.66	1.00						
12	0.97	-0.31	0.98	-0.68	-0.46	0.59	0.09	0.23	0.51	0.71	0.40	1.00					
13	0.98	-0.28	0.98	-0.68	-0.42	0.56	0.11	0.25	0.54	0.70	0.35	0.98	1.00				
14	0.97	-0.24	0.94	-0.69	-0.37	0.43	0.18	0.28	0.42	0.67	0.34	0.95	0.96	1.00			
15	0.25	0.23	0.22	-0.21	-0.06	0.02	0.08	0.17	0.38	0.16	-0.02	0.19	0.25	0.22	1.00		
16	0.57	-0.12	0.60	-0.72	-0.44	0.46	0.14	0.43	0.35	0.66	0.44	0.52	0.50	0.47	0.10	1.00	
17	-0.28	0.29	-0.29	0.49	0.26	-0.23	-0.03	-0.09	-0.13	-0.32	-0.21	-0.29	-0.28	-0.30	-0.02	-0.37	1.00
18	-0.07	0.32	-0.07	0.19	0.03	-0.07	-0.04	0.05	0.20	-0.06	-0.17	-0.11	-0.06	-0.14	0.33	-0.11	0.52

제 6 장 분석결과

1. 하우스만 검정

본 연구에서 구축된 데이터는 등분산성(homoscedasticity)이 있기 때문에 고정효과(fixed effects model)인지 확률효과(random effects model)인지 판단해야 한다. 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상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자료의 특성에 맞는 분석모형을 설정할 수 있는 하우스만 검정을 통해 고정효과모형 혹은 확률효과모형 중 어느 모형이 적합한지 분석하였다.

하우스만 검정의 귀무가설은 오차 항에 체계적인 차이가 없다(systematic difference)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보게 될 종속변수인 총 출생아수, 연령별 출산율, 출생순위별 출산율 모두 하우스만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식 1] 하우스만 검정결과

Test: Ho: difference in coefficients not systematic
chi2(14) = (b-B)'[(V_b-V_B)^(-1)](b-B) = 246.63 (총 출생아수)
chi2(13) = (b-B)'[(V_b-V_B)^(-1)](b-B) = 601.59 (연령별 출산율)
chi2(15) = (b-B)'[(V_b-V_B)^(-1)](b-B) = 373.21 (출생순위별 출산율)
Prob>chi2 = 0.0000
(V_b-V_B is not positive definite)

본 연구의 종속변수들의 하우스만 검정 결과 p값이 0이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즉 모두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2] 전국의 합계출산율, 총 출생아수, 연령별 출산율, 출생순위별 출생아수 결과 표

합계출산율 model1				총출생아수 model2			연령별출산율model3 coef.								출생순위별 출생아수model4 coef.		
전국	Coef.	Std. Err.	P>z	Coef.	Std. Err.	P>z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1아출생수	2아출생수	3아출생수	
전체 출산금	0.0114	0.0088	0.1970	17.6670	13.7181	0.1980	-0.1670	-0.3370	-2.1842	3.6606	2.8655	0.4622	0.0045	1.9443	9.4667	9.3993	
시행 여부	0.0001	0.0000	0.0000	0.0494	0.0214	0.0210	0.0001	0.0048	0.0109	0.0117	0.0007	0.0002	0.0000	0.1697	0.0809	0.0106	
자동차수	0.7052	0.0869	0.0000	317.4559	133.7580	0.0180	-3.9386	-22.6220	-27.4062	143.1908	48.7484	3.6718	-0.3086	167.1428	147.7672	13.0876	
혼인수	0.0001	0.0000	0.0000	1.4593	0.0230	0.0000	-0.0002	0.0008	0.0034	0.0050	0.0009	0.0001	0.0000	0.7994	0.5290	0.1246	
고령화율	0.0151	0.0022	0.0000	-7.4689	3.3611	0.0260	0.1286	0.3095	-1.2783	1.7090	0.9312	0.1334	0.0030	-2.8504	-3.6187	-2.2927	
면적	0.0000	0.0000	0.4770	-0.0678	0.0582	0.2440	-0.0003	0.0027	0.0149	-0.0057	-0.0025	-0.0001	0.0000	-0.0315	-0.0318	0.0083	
도시화	0.0000	0.0000	0.0000	-0.0354	0.0037	0.0000	-0.0001	-0.0007	-0.0023	-0.0002	0.0003	0.0000	0.0000	-0.0066	-0.0187	-0.0098	
순인구 이동율	0.0000	0.0000	0.1110	-0.0062	0.0012	0.0000	0.0000	0.0000	0.0000	-0.0002	-0.0001	0.0000	0.0000	-0.0025	-0.0021	-0.0016	
인구 증가율	0.0083	0.0019	0.0000	7.0917	2.9710	0.0170	-0.0145	0.0519	0.2639	1.1221	0.3977	0.1352	0.0148	3.5222	2.2150	1.1910	
복지 비율	0.0004	0.0007	0.5110	-3.2985	1.0121	0.0010	-0.0099	-0.0829	-0.3707	0.3171	0.2908	0.0269	-0.0010	-1.6547	-1.3179	0.1222	
재정 자립도	-0.0006	0.0007	0.3680	0.4188	1.0997	0.7030	-0.0283	-0.0475	-0.1570	-0.0125	0.1512	0.0300	0.0014	0.1496	0.6806	-0.0990	
재정 자주도	-0.0002	0.0007	0.7690	-0.8386	1.0253	0.4130	0.0117	-0.0456	0.0384	0.0862	-0.1373	-0.0344	-0.0013	0.0044	-0.5584	-0.3602	
전출 인구	-0.0058	0.0089	0.5150	5.2565	13.8126	0.7040	-0.1773	-0.0404	-0.1733	0.5764	-0.8237	0.0353	0.0051	2.4142	5.4590	-6.4514	
주민등록 자수	-0.0304	0.0279	0.2760	180.9440	41.4389	0.0000	0.6301	-3.2751	-8.2361	-0.6911	-1.5426	-0.7897	-0.0572	16.9827	106.3246	44.5826	
유치원수	0.0003	0.0005	0.4640	1.9805	0.6792	0.0040	0.0026	-0.0114	-0.0039	0.0577	0.0287	0.0040	0.0001	0.1629	1.4260	0.7403	
조이혼율	0.0051	0.0110	0.6440	20.4405	16.9543	0.2280	0.2867	3.3059	4.4281	-4.3677	-2.1221	-0.1485	0.0194	-3.6409	19.5285	-7.7713	
조혼인율	0.0641	0.0060	0.0000	-96.2828	9.2687	0.0000	0.5575	2.5111	6.0059	3.1908	1.0643	0.1752	0.0080	-30.2558	-50.9620	-13.0011	
보육시설 비율	-0.0040	0.0012	0.0000	-9.9899	1.7990	0.0000	-0.0268	-0.2378	-1.1296	0.3909	0.3432	0.0550	-0.0011	-3.6023	-5.5686	0.0466	
상수항	0.8512	0.3187	0.0080	-1341.3610	472.8158	0.0050	-6.1711	53.8892	200.8428	-8.6144	13.1575	8.5211	0.8562	-7.9111	-870.2290	-286.7431	
rho	0.6212			0.5828			0.1155	0.4857	0.6194	0.3967	0.1976	0.1281	0.0189	0.4429	0.5962	0.7603	

※ 음영 표시가 신뢰수준 95%이상의 회귀계수, 밑줄 친 회귀계수는 신뢰수준 99%이다.

2. 전국 분석결과

[표32]는 독립변수인 출산장려금이 전체 연구대상(전국)의 합계출산율(model 1)과 총 출생아수(model 2), 연령별 출산율(model 3), 출생순위별 출생아수(model 4)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합계출산율 Model 1의 결과를 먼저 설명하면, 출산장려금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이외에도 1인당 자동차수, 혼인수, 고령화율, 도시화율, 인구증가율, 조혼인율, 보육시설비율이 99%의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총 출생아수 Model 2의 결과 또한, 출산장려금이 총 출생아수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 model 2에서는 자동차수, 혼인수, 인구증가율, 주민등록자수, 유치원수가 양의 관계가 있음이 확인된 반면 고령화율과 도시화, 순인구이동율과 조혼인율, 보육시설 비율은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연령별 출산율 Model 3에서는 25~44세에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신뢰수준은 99%이다. 하지만 주 연령층이 포함되어있는 20~24세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model 3에서는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선정했던 변수들이 유의미하게 양·음의 관계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생순위별 출산율 Model 4에서는 출산장려금이 출생순위별 3번째 출생아수에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고 신뢰수준은 95%였다. model 4에서도 통제변수들이 유의미한 양·음 관계를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각 모델의 Rho값은 오차항의 총분산에서 패널의 개체특성을 의미하는 오차항의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며, 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패널 개체의 특성을 감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석호원, 2011)

위의 결과를 통해 전국에 출산장려금 정책에 의한 효과가 크지 않음을 알게 되었지만, 해당 연구에서는 자료 확보가 가능한 179개의 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결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출산장려금의 액수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일반적인 결론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전국을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3. 서울시 분석결과

다음 [표33]는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한 Model 1~4의 결과표이다. 분석 결과 연령별 출산율 Model 3의 주 출산층인 30~34세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을 뿐, 모든 모형에서 거의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서울시는 마포구를 제외하고는 전 지역이 출산장려금제도를 채택하여 산모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효과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출산 산모의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 중 하나인 서울에서는 출산장려금이 아닌 다른 정책으로 산모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서울은 지역구마다 산모의 수가 많기 때문에 지방(예를 들면 전라도, 경상도)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수준의 금액을 지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에 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구가 많은 만큼 산모에게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의 액수는 소액일 수밖에 없으므로 출산장려금이 출산율 제고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인 조혼인율은 합계출산율에서는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반대로 총 출생아수에서는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조혼인율이 낮을수록 총 출생아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표 33] 서울의 합계출산율, 총 출생아수, 연령별 출산율, 출생순위별 출생아수 결과 표

서울	합계출산율 model1			총출생아수 model2			연령별출산율 model3							출생순위별 출생아수 model4
	Coef.	Std. Err.	P>z	Coef.	Std. Err.	P>z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1아출생수
출산장려금	0.0054	0.0043	0.2120	16.2392	15.9120	0.3070	0.0169	-0.1836	-0.1463	1.1348	0.2822	0.0939	0.0124	35.6257
1인당자동차수	0.0434	0.1667	0.7940	138.5073	601.9762	0.8180	0.0280	-3.1497	-3.0135	-7.7371	16.5817	-0.8560	-0.0010	-168.4222
혼인수	0.0000	0.0001	0.3630	1.2518	0.1841	0.0000	-0.0003	0.0014	0.0025	0.0093	-0.0012	0.0003	0.0000	0.8916
고령화율	0.0186	0.0112	0.0980	-29.4628	38.3122	0.4420	0.0541	-0.4190	-2.3488	1.8718	2.4927	0.3718	-0.0193	-50.0564
면적	-0.0022	0.0085	0.7930	6.4189	25.1917	0.7990	-0.0585	-0.1445	-0.7322	-0.0667	0.3487	0.0276	0.0008	-19.3189
도시화	0.0000	0.0000	0.7580	0.0080	0.0373	0.8300	-0.0001	-0.0002	-0.0006	0.0005	0.0006	0.0000	0.0000	-0.0551
순인구이동율	0.0000	0.0000	0.0870	-0.0135	0.0044	0.0020	0.0000	0.0000	0.0000	-0.0004	-0.0001	0.0000	0.0000	-0.0068
인구증가율	0.0049	0.0046	0.2820	22.7356	16.9580	0.1800	-0.0174	0.0009	-0.1529	0.8562	0.3463	0.1910	0.0201	4.4982
복지비율	0.0005	0.0019	0.8060	5.6480	6.9623	0.4170	0.0338	-0.0036	-0.1541	0.1637	0.3240	0.0557	0.0029	8.1898
재정자립도	-0.0007	0.0012	0.5350	-1.9606	4.1010	0.6330	-0.0024	-0.0483	-0.1160	-0.0639	0.0658	0.0008	-0.0013	5.7661
재정자주도	0.0040	0.0019	0.0370	12.2592	7.1141	0.0850	0.0239	-0.0068	0.3921	0.4507	-0.0113	0.0130	0.0013	4.3650
전출인구	0.0123	0.0119	0.2980	-21.5596	43.5548	0.6210	0.0982	0.8985	-0.9860	2.2259	0.3543	0.0459	0.0459	1.7941
주민등록수	-0.0147	0.2328	0.9500	-71.6908	708.9896	0.9190	1.8553	-2.2734	8.8734	-14.1463	0.4005	-1.7440	-0.3584	-273.9156
유치원수	0.0021	0.0018	0.2450	9.9279	5.8818	0.0910	-0.0011	-0.0339	0.1370	0.1940	-0.0653	-0.0171	0.0014	7.2042
조이혼율	-0.0310	0.0289	0.2840	-43.8499	103.2312	0.6710	0.7063	2.0039	1.5489	-5.9309	-4.4541	-1.1779	-0.1199	-171.4744
조혼인율	0.0471	0.0230	0.0400	-186.3964	79.2869	0.0190	0.1566	-0.1087	2.3737	3.3682	2.4893	0.1845	0.0003	-224.9519
보육시설비율	-0.0016	0.0023	0.4820	-12.4420	8.5069	0.1440	-0.0393	0.0564	-0.2019	-0.1696	0.0873	-0.0348	-0.0043	-11.2749
_cons	0.0611	2.6845	0.9820	1286.0650	8263.2660	0.8760	-25.8400	37.1612	-41.8071	144.8240	-42.6555	19.0758	4.3701	5818.8640
rho	0.8749			0.7917			0.0815	0.4457	0.8729	0.8497	0.5369	0.0000	0.0000	0.0000

※ 음영 표시가 신뢰수준 95%이상의 회귀계수, 밑줄 친 회귀계수는 신뢰수준 99%이다.

4. 경기도 분석결과

다음 표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경기도 지역의 출산장려금으로 인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표이다. 방식은 앞선 결과표와 동일하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인 경기도는 규모로 따졌을 때 서울의 자치구와 비슷한 정도이기 때문에 서울지역과 비교를 통해 출산장려금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경기도는 서울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합계출산율 model 1에서 99%신뢰수준에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출생아수 model2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별 출산율 model 3에서는 주요 출산층인 30~39세의 연령층에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99%신뢰수준에서 나타났다.

출생순위별 출생아수 model 4에서는 2아와 3아 출생수에만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신뢰관계 99%에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제변수에서는 조혼인율이 연령별 출산율 model 3의 15~39세에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일정하게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 34] 경기도의 합계출산율, 총 출생아수, 연령별 출산율, 출생순위별 출생아수 결과 표

경기도	합계출산율 model1			총출생아수 model2			연령별출산율 model3							출생순위별 출생아수 model4		
	Coef.	Std. Err.	P>z	Coef.	Std. Err.	P>z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1아출생수	2아출생수	3아출생수
출산장려금	0.0331	0.0069	0.0000	17.7468	19.4685	0.3620	-0.0103	0.1145	0.7996	4.2006	1.9578	0.0238	-0.0007	2.0473	0.8206	0.0763
1인당자동차수	0.5608	0.3506	0.1100	-1092.3190	1364.5440	0.4230	0.9308	8.2022	3.5753	71.1478	13.8159	0.2214	0.1457	-348.4960	96.5230	185.1570
혼인수	0.0000	0.0000	0.1490	1.4271	0.1094	0.0000	-0.0001	-0.0003	-0.0027	-0.0035	-0.0011	-0.0001	0.0000	0.6951	0.4369	0.1654
고령화율	0.0196	0.0098	0.0440	-46.2914	32.6590	0.1560	0.1315	0.1229	-1.1163	1.4845	1.4899	0.0794	-0.0072	-8.4027	-47.8786	-17.0253
면적	-0.0001	0.0001	0.4330	1.2122	0.5229	0.0200	-0.0006	0.0092	0.0241	-0.0182	-0.0151	0.0006	0.0001	0.1007	0.3237	0.1163
도시화	0.0000	0.0000	0.2460	-0.0364	0.0342	0.2870	0.0000	-0.0001	-0.0008	0.0001	-0.0004	0.0000	0.0000	0.0105	-0.0127	-0.0159
순인구이동율	0.0000	0.0000	0.4370	-0.0016	0.0043	0.7040	0.0000	0.0000	0.0001	0.0001	0.0000	0.0000	0.0000	0.0033	0.0041	-0.0013
인구증가율	-0.0011	0.0043	0.7980	-7.1540	11.9266	0.5490	0.0156	-0.2292	-0.0207	-0.0300	0.0231	0.0922	0.0024	-13.1791	-17.0661	-0.8396
복지비용	-0.0033	0.0019	0.0890	-6.3849	5.8501	0.2750	-0.0228	-0.1929	-1.1835	0.3183	0.5502	0.0546	-0.0058	-5.8188	-0.9400	1.4147
재정자립도	0.0009	0.0019	0.6370	6.8089	5.5132	0.2170	-0.0070	0.0787	-0.1255	0.2961	0.1579	0.0315	-0.0041	3.6035	4.6424	0.8113
재정자주도	-0.0020	0.0021	0.3590	-4.7920	6.0785	0.4300	-0.0078	-0.0521	-0.1748	-0.1804	-0.0892	0.0074	0.0050	-0.1031	-0.4396	-0.2453
전출인구	-0.1372	0.0409	0.0010	-50.2084	112.7781	0.6560	-0.2768	-0.9819	-0.3901	-13.7339	-8.8586	-2.6117	-0.0600	0.0003	0.0014	-0.0010
주민등록수	0.2315	0.0800	0.0040	611.9084	290.1379	0.0350	0.2592	-3.0405	5.1800	23.0096	11.1848	1.9765	0.0600	-0.0001	-0.0003	-0.0002
유치원수	0.0006	0.0011	0.5890	-6.6114	4.0112	0.0990	0.0046	0.0195	0.0207	0.0365	0.0168	0.0022	-0.0003	3.6289	5.8883	1.5197
조이혼율	-0.0048	0.0261	0.8550	-136.0714	84.1289	0.1060	0.7502	6.9674	6.7938	-12.8541	-5.6538	-0.0059	0.0214	-61.966	-29.8189	-13.0953
조혼인율	0.1236	0.0166	0.0000	-72.7312	52.8611	0.1690	0.4502	3.7523	10.5388	7.3727	2.2643	0.1566	0.0253	12.4523	-49.5749	-31.4380
보육시설비용	-0.0028	0.0020	0.1680	-3.9191	5.7663	0.4970	-0.0044	-0.1253	-0.5118	0.1162	0.1563	0.0547	0.0059	1.2199	-3.9051	-1.3735
_cons	-1.2518	0.9189	0.1730	-4899.8350	3382.0170	0.1470	-3.1640	26.0792	4.5289	-123.9741	-58.6458	1.1556	-0.2347	196.6583	729.819	318.6816
rho	0.5851			0.8359			0.0000	0.5610	0.6660	0.4430	0.3827	0.0680	0.0000	0.1583	0.3045	0.5878

※ 음영 표시가 신뢰수준 95%이상의 회귀계수, 밑줄 친 회귀계수는 신뢰수준 99%이다.

5. 충청도 분석결과

다음 표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충청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나타나는 출산장려금의 효과 표이다.

충청지역은 합계출산율 model 1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났으며, 총출생아수 model 2에서는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연령별 출산율 model 3에서는 25~34세, 40~44세에서 유의미한 양의 관계, 45~49세에서는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신뢰수준 99%에서 미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출생순위별 출생아수 model 4에서는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통제변수에서 혼인수, 도시화, 재정자립도에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밝혀졌다.

통제변수에서는 조혼인율이 연령별 출산율 model 3의 15~39세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 35] 충청도의 합계출산율, 총 출생아수, 연령별 출산율, 출생순위별 출생아수 결과 표

충청도	합계출산율 model1			총출생아수 model2			연령별출산율 model3							출생순위별 출생아수 model4
	Coef.	Std. Err.	P>z	Coef.	Std. Err.	P>z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1아출생 수
출산장려금	0.0206	0.0086	0.0170	6.5346	10.7024	0.5410	0.0951	0.4221	2.0867	<u>2.9302</u>	-0.4608	0.2081	-0.0425	-1.1486
1인당자동차수	0.5384	0.4298	0.2100	-648.09 58	463.654 2	0.1620	<u>-18.507</u> 3	<u>-61.715</u> 6	<u>-165.18</u> 72	<u>210.535</u> 9	<u>96.3670</u>	<u>13.1301</u>	-1.2810	-233.91 90
혼인수	0.0000	0.0001	0.7850	<u>1.5222</u>	0.0505	0.0000	0.0002	0.0018	-0.0030	-0.0023	0.0028	-0.0002	0.0000	<u>0.7249</u>
고령화율	0.0025	0.0059	0.6730	-6.5236	5.2129	0.2110	0.1832	0.7141	-0.7419	0.0915	0.4011	0.0347	0.0128	3.3199
면적	-0.0003	0.0002	0.0790	0.0346	0.1312	0.7920	-0.0007	-0.0087	-0.0435	-0.0164	0.0041	-0.0005	0.0001	0.0515
도시화	-0.0001	0.0001	0.2410	0.1015	0.0462	0.0280	-0.0003	-0.0037	-0.0141	0.0010	0.0008	0.0000	-0.0001	<u>0.0968</u>
순인구이동율	0.0000	0.0000	0.0740	<u>-0.0388</u>	0.0076	0.0000	-0.0002	-0.0005	-0.0007	-0.0001	-0.0006	0.0000	0.0000	<u>-0.0246</u>
인구증가율	0.0093	0.0041	0.0240	<u>33.9739</u>	5.1082	0.0000	0.0588	0.2099	<u>1.5926</u>	-0.2199	0.0606	0.0419	0.0198	<u>17.3522</u>
복지비율	0.0081	0.0036	0.0240	3.4510	4.4199	0.4350	0.0517	-0.0167	0.4587	0.3590	0.3632	0.0267	0.0166	-0.5474
재정자립도	0.0031	0.0029	0.2810	<u>14.1724</u>	3.3029	0.0000	-0.0157	0.2127	0.2845	-0.0710	0.1964	0.0351	0.0113	<u>8.1901</u>
재정자주도	-0.0032	0.0026	0.2220	<u>-10.518</u> 5	3.1548	0.0010	-0.0201	<u>-0.2370</u>	-0.2200	0.1442	-0.0318	-0.0343	0.0068	-0.6729
전출인구	0.0193	0.0172	0.2610	42.5116	22.0896	0.0540	-0.0767	0.6098	3.0475	-0.5079	-0.2929	-0.0466	0.0756	21.5961
주민등록수	-0.0764	0.0873	0.3820	<u>-76.373</u> 5	74.6367	0.3060	-0.6558	-3.2541	0.0382	0.4316	<u>-7.8987</u>	-0.5672	-0.1542	-23.156 0
유치원수	-0.0008	0.0011	0.4600	-1.4772	0.8380	0.0780	-0.0091	-0.0576	-0.1681	0.0619	0.0214	-0.0022	-0.0016	-0.3439
조이혼율	-0.0774	0.0362	0.0320	<u>-84.674</u> 1	44.9789	0.0600	0.4579	2.6940	-5.8997	<u>-9.5056</u>	-2.3504	-0.1703	-0.0969	-25.087 0
조혼인율	<u>0.1112</u>	0.0190	0.0000	<u>-74.847</u> 5	22.3240	0.0010	<u>0.9625</u>	<u>2.7072</u>	<u>9.2815</u>	<u>6.9542</u>	1.2249	0.1419	-0.0106	-19.652 8
보육시설비율	0.0019	0.0046	0.6820	10.1606	4.5852	0.0270	0.0770	-0.0358	-0.8754	<u>1.1250</u>	0.2236	-0.0066	-0.0094	1.4207
_cons	1.3944	0.9816	0.1550	1554.74 70	885.904 0	0.0790	7.7385	62.3980	142.784 8	-40.603 8	66.5545	4.3961	1.1622	80.3555
rho	0.5857			0.2530			0.2336	0.5684	0.6308	0.0016	0.0000	0.0658	0.0000	0.0086

※ 음영 표시가 신뢰수준 95%이상의 회귀계수, 밑줄 친 회귀계수는 신뢰수준 99%이다.

6. 강원도 분석결과

다음 표는 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효과이다. 강원 지역에서도 합계출산율 model 1, 총 출생아수 model 2, 출생순위별 출생아수 model 4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다만 연령별 출산율 model 3에서 35~39에서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을 뿐이었다.

특이할 점은 통제변수에서 고령화율이 model 1~3에서 모두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연령별 출산율 model 3에서는 15~39세의 연령층에 출산장려금이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제변수인 혼인수는 출생순위별 출생아수 model 4에서 모두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조혼인율은 모두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강원도에서는 출산장려금이 출산에 관련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밝혀졌다.

[표 36] 강원도의 합계출산율, 총 출생아수, 연령별 출산율, 출생순위별 출생아수 결과 표

강원도	합계출산율 model1			총출생아수 model2			연령별출산율 model3							출생순위별 출생아수 model4		
	Coef.	Std. Err.	P>z	Coef.	Std. Err.	P>z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1아출생수	2아출생수	3아출생수
출산장려금	0.0048	0.0113	0.6700	6.3934	4.0346	0.1130	0.0154	0.0070	1.1592	0.5393	-0.8345	0.0192	0.0160	4.5921	-4.5917	-0.7975
1인당자동차수	-0.0344	0.7223	0.9620	0.9424	257.8658	0.9970	3.7174	2.8833	-124.3442	41.7379	67.4422	-0.3296	-2.6715	-239.5848	50.1190	-243.6857
혼인수	0.0002	0.0002	0.3130	<u>1.6122</u>	0.0578	0.0000	0.0000	<u>0.0160</u>	0.0310	-0.0122	-0.0018	0.0017	0.0006	<u>0.7840</u>	<u>0.6781</u>	<u>0.2177</u>
고령화율	<u>-0.0652</u>	0.0160	0.0000	<u>-26.5868</u>	5.7108	0.0000	-0.5209	<u>-2.4912</u>	<u>-5.7880</u>	<u>-2.7553</u>	<u>-2.0866</u>	0.0469	0.0998	-10.2578	-5.7221	-0.4875
면적	-0.0001	0.0001	0.6000	-0.0472	0.0342	0.1670	0.0013	0.0011	-0.0041	-0.0023	-0.0037	0.0000	0.0001	-0.0263	0.0043	0.0292
도시화	<u>-0.0006</u>	0.0002	0.0020	<u>-0.1914</u>	0.0717	0.0080	-0.0007	-0.0054	-0.0334	<u>-0.0658</u>	<u>-0.0265</u>	-0.0005	0.0011	-0.0153	-0.0532	0.0430
순인구이동율	0.0000	0.0000	0.9610	0.0118	0.0122	0.3340	0.0003	0.0005	0.0018	-0.0023	-0.0008	-0.0002	0.0000	0.0227	0.0079	0.0008
인구증가율	0.0170	0.0229	0.4570	-1.6657	8.1614	0.8380	-0.1022	-0.0117	0.1642	3.1027	0.9576	-0.0653	-0.0544	4.6419	6.6855	5.0589
복지비용	<u>0.0243</u>	0.0069	0.0000	<u>4.8325</u>	2.4639	0.0500	0.1207	0.3206	<u>1.5348</u>	<u>2.8771</u>	<u>0.4921</u>	-0.0451	0.0061	0.4579	<u>4.9206</u>	0.0756
재정자립도	<u>-0.0219</u>	0.0066	0.0010	-4.7944	2.3591	0.0420	-0.0589	<u>-1.5742</u>	<u>-3.6496</u>	0.6049	0.3787	0.0306	-0.0099	-2.7221	2.8098	1.2351
재정자주도	<u>0.0194</u>	0.0061	0.0020	4.8879	2.1922	0.0260	<u>0.1359</u>	<u>1.1153</u>	<u>2.1965</u>	0.3518	0.1710	0.0101	0.0078	2.8868	0.7232	0.1490
전출인구	-0.0848	0.0642	0.1870	-8.5646	22.9254	0.7090	-0.5326	-0.6875	1.2747	<u>-14.0828</u>	-4.5125	-0.0055	-0.1165	5.5040	<u>-33.6915</u>	-23.9970
주민등록수	<u>-0.2816</u>	0.1199	0.0190	<u>-106.5085</u>	42.8168	0.0130	-1.7155	<u>-17.9866</u>	<u>-36.4368</u>	0.5936	-4.2958	-1.7095	-0.1128	-49.3411	<u>-90.9664</u>	-42.6842
유치원수	-0.0008	0.0028	0.7620	-0.7570	0.9945	0.4470	-0.0098	0.1217	0.0644	-0.1591	-0.1417	0.0106	0.0031	-0.3318	0.8440	0.8414
조이혼율	-0.0545	0.0564	0.3350	<u>-27.1907</u>	20.1486	0.1770	-0.9215	-1.8228	-1.4956	1.7840	<u>-6.1814</u>	<u>-1.6867</u>	-0.2416	-12.9858	<u>-19.1788</u>	2.4222
조혼인율	0.0603	0.0344	0.0800	<u>-44.6724</u>	12.2742	0.0000	-0.6134	0.2828	6.8095	5.1583	-0.4030	0.3881	0.2235	<u>-24.3767</u>	<u>-24.3125</u>	-8.5425
보육시설비용	0.0121	0.0085	0.1570	4.0916	3.0525	0.1800	0.0247	0.2687	-0.0924	0.9055	<u>1.1153</u>	0.1356	-0.0162	-1.2420	-0.8150	1.4595
_cons	4.6954	1.3392	0.0000	1573.8430	478.1189	0.0010	27.4704	205.9671	479.8053	145.7342	122.6913	21.2027	0.2633	763.5715	1343.9970	713.8502
rho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음영 표시가 신뢰수준 95%이상의 회귀계수, 밑줄 친 회귀계수는 신뢰수준 99%이다.

7. 전라도 분석결과

다음 표는 전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나타는 출산장려금의 효과이다. 전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출산장려금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합계출산율에서 99%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총 출생아수에서는 90%의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연령별 출산율 model 3에서는 20~44세, 즉 우리나라 출산 산모의 92%를 차지하는 연령층에서 대부분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출생순위별 출생아수 model4에서도 모든 출생순위별에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렇게 전라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산장려금의 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난 이유를 추정하면 먼저 출산장려금의 액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크다는 점, 출산장려금의 혜택을 받는 산모가 비교적 소수인 점을 들 수 있다.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더라도 혜택을 받는 대상의 수가 적을 경우, 혜택은 더 크게 돌아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는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선정했던 변수들이 유의미하게 나온 반면, 전라도 지역에서는 1인당 자동차수가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비교적 많이 나타났으며, 보육시설 비율은 전 모델에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많이 나타났다.

[표 37] 전라도의 합계출산율, 총 출생아수, 연령별 출산율, 출생순위별 출생아수 결과 표

전라도	합계출산율 model1			총출생아수 model2			연령별출산율 model3							출생순위별 출생아수 model4
	Coef.	Std. Err.	P>z	Coef.	Std. Err.	P>z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1아출생 수
출산장려금	0.0341	0.0076	0.0000	8.1186	3.4283	0.0180	0.1090	0.9580	2.7369	2.4893	0.6697	0.1800	-0.0068	12.0381
1인당자동차수	1.3684	0.3109	0.0000	269.3620	138.4545	0.0520	-2.7076	-10.5881	26.0232	214.1151	79.5976	9.9005	0.0867	386.5200
혼인수	0.0001	0.0001	0.4810	1.5395	0.0528	0.0000	-0.0007	0.0012	-0.0037	0.0146	0.0051	0.0013	0.0001	0.7730
고령화율	0.0198	0.0103	0.0550	-6.8441	4.5266	0.1310	0.0289	0.0009	-1.3874	2.4798	1.5673	0.0129	-0.0247	-5.1020
면적	0.0002	0.0003	0.3580	0.1354	0.1157	0.2420	-0.0008	0.0088	0.0194	0.0199	-0.0015	0.0004	0.0002	-0.0080
도시화	0.0001	0.0001	0.2530	0.0807	0.0256	0.0020	0.0002	0.0018	0.0020	0.0061	0.0021	0.0002	0.0000	0.0104
순인구이동율	0.0000	0.0000	0.5160	-0.0138	0.0075	0.0640	0.0000	0.0002	0.0005	0.0014	0.0008	0.0000	0.0000	0.0061
인구증가율	0.0013	0.0088	0.8820	4.2207	3.9506	0.2850	0.0382	-0.5860	-0.3480	0.3553	0.3360	0.1312	0.0261	-2.8522
복지비용	0.0005	0.0015	0.7650	-1.9347	0.6866	0.0050	0.0008	-0.0425	-0.0553	0.1296	0.0722	0.0121	0.0005	-1.0328
재정자립도	-0.0001	0.0058	0.9870	4.8601	2.5958	0.0610	-0.0675	-0.0670	-0.0008	-0.0218	0.0985	0.0301	-0.0159	0.0019
재정자주도	-0.0051	0.0045	0.2600	-2.3695	2.0122	0.2390	-0.0045	-0.1317	0.1648	-0.7531	-0.1151	-0.1583	-0.0046	2.3987
전출인구	-0.0260	0.0327	0.4270	25.6558	14.6773	0.0800	0.0170	-0.7144	-2.5766	-0.8160	-1.4038	-0.0806	-0.0559	8.1003
주민등록수	0.0203	0.1329	0.8780	-56.8432	57.6664	0.3240	0.4872	-8.7195	-0.2150	3.6194	1.7961	-2.3427	-0.0846	-8.1422
유치원수	0.0016	0.0018	0.3850	-0.1364	0.7919	0.8630	0.0111	0.0547	0.0976	0.0657	0.0323	0.0124	0.0030	-0.7042
조이혼율	-0.0363	0.0587	0.5370	6.0956	26.3424	0.8170	0.5644	3.3289	-2.4339	-7.1717	0.8890	-0.5151	-0.0303	-20.0054
조혼인율	0.0708	0.0291	0.0150	-56.6031	13.0266	0.0000	0.3317	5.3134	6.4965	2.2944	0.9047	0.0839	-0.0039	-15.0513
보육시설비용	-0.0373	0.0083	0.0000	-9.7494	3.6420	0.0070	-0.1218	-0.3857	-3.5616	-2.4597	-0.4827	-0.0824	-0.0204	-2.5258
_cons	0.4978	1.5820	0.7530	783.3025	688.9792	0.2560	-2.3068	104.1498	126.2085	-19.2938	-42.2977	36.0682	3.0234	-76.0621
rho	0.5784			0.5528			0.1241	0.1271	0.5384	0.5009	0.3281	0.0657	0.1322	0.0032

※ 음영 표시가 신뢰수준 95%이상의 회귀계수, 밑줄 친 회귀계수는 신뢰수준 99%이다.

8. 경상도 분석결과

다음 표는 경상지역의 출산장려금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경상 지역도 타 지역에 비해 출산장려금의 액수가 높은 지역이다. 합계출산율 model 1에서 90%수준에서 유의미한 양의 영향, 총 출생아수 model 2에서 95% 수준에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연령별 출산율 model 3에서 20~29세에는 유의미한 양의 관계, 35~44세에는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통제변수에서는 보육시설비율이 전 model에서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조혼인율은 합계출산율, 연령별 출산율에서는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지만, 총 출생아수와 출생순위별 출생아수에서는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경상도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합계 출산장려금의 평균 액수가 가장 큰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38] 경상도의 합계출산율, 총 출생아수, 연령별 출산율, 출생순위별 출생아수 결과 표

경상도	합계출산율 model1			총출생아수 model2			연령별출산율 model3							출생순위별 출생아수 model4		
	Coef.	Std. Err.	P>z	Coef.	Std. Err.	P>z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1아출생수	2아출생수	3아출생수
출산장려금	0.0097	0.0052	0.0620	9.6812	4.3142	0.0250	-0.0667	0.7589	1.4789	0.5943	-0.6114	-0.1801	0.0151	6.2843	0.6074	1.6790
1인당자동차수	0.7254	0.2457	0.0030	262.0357	202.3124	0.1950	-5.7537	-29.3373	-38.4887	130.0095	68.0359	3.0994	-0.3544	187.5009	-0.5477	-26.4125
혼인수	0.0000	0.0001	0.5520	1.3053	0.0646	0.0000	-0.0004	0.0012	-0.0033	-0.0068	-0.0035	-0.0006	0.0000	0.7084	0.4842	0.1233
고령화율	0.0192	0.0062	0.0020	-4.3891	5.0992	0.3890	0.0533	0.3427	-0.4359	2.6170	0.4170	0.0343	0.0042	-1.1325	-3.8420	-2.3131
면적	0.0002	0.0001	0.0830	0.2352	0.0955	0.0140	0.0005	-0.0067	0.0053	0.0339	0.0136	0.0022	0.0003	0.1011	0.0972	0.0222
도시화	0.0005	0.0003	0.0480	1.2787	0.2240	0.0000	0.0010	-0.0079	-0.0063	0.0795	0.0321	0.0047	0.0004	0.5795	0.3093	0.0276
순인구이동율	0.0000	0.0000	0.5370	-0.0046	0.0066	0.4890	-0.0001	-0.0001	-0.0002	-0.0010	0.0001	0.0000	0.0000	0.0015	0.0024	0.0041
인구증가율	0.0101	0.0087	0.2470	1.0449	7.2152	0.8850	0.0490	0.6279	0.0177	1.8047	-0.1454	0.1035	0.0335	-2.2435	-2.9699	-1.6793
복지비용	0.0122	0.0039	0.0020	1.1915	3.2457	0.7140	-0.0689	0.2122	-0.4188	1.9983	1.0436	0.1469	0.0075	0.6233	4.5497	1.3659
재정자립도	0.0024	0.0038	0.5300	4.9167	3.0973	0.1120	-0.0654	-0.1519	0.1804	0.6318	0.1889	0.0211	0.0074	2.7513	3.3043	-0.3118
재정자주도	-0.0056	0.0032	0.0820	-4.8255	2.6835	0.0720	0.0533	0.2578	-0.3671	-0.9414	-0.3940	-0.0217	0.0003	0.2159	-1.3740	-0.6527
전출인구	0.0295	0.0228	0.1950	62.0535	18.8609	0.0010	-0.0644	0.0862	1.9416	4.9112	-0.0692	-0.1183	-0.0091	-5.2934	-2.2157	-1.5884
주민등록수	-0.0677	0.0706	0.3380	-74.6204	57.4949	0.1940	0.4969	0.9694	5.8197	-15.8969	-10.7212	-1.8617	-0.2300	-18.9381	-32.0251	-0.6717
유치원수	0.0014	0.0012	0.2170	-0.6482	0.9362	0.4890	-0.0065	-0.0021	0.0352	0.1565	0.0517	0.0086	-0.0007	0.2315	0.5195	0.0720
조이혼율	-0.0458	0.0409	0.2630	-9.7017	33.8644	0.7750	-0.1723	-2.4429	0.3497	-3.4920	-0.3290	0.2501	0.1039	-4.3874	-9.9081	3.9768
조혼인율	0.1032	0.0193	0.0000	-47.8445	15.9202	0.0030	0.6174	2.5376	8.5500	7.9167	1.5416	-0.0896	-0.0017	-21.7957	-18.1352	-7.1247
보육시설비용	-0.0107	0.0038	0.0050	-5.8558	3.1357	0.0620	0.0124	-0.4066	-0.9181	-0.4590	-0.2635	0.0084	0.0007	-5.1029	-1.9516	0.6455
_cons	0.6446	0.7912	0.4150	463.2959	644.4195	0.4720	-4.1769	-3.1389	15.0643	83.0622	110.9056	22.4200	1.9671	122.6257	467.5457	111.9890
rho	0.4877			0.4738				0.5030	0.5829	0.3135	0.1122	0.0789	0.0000	0.8489	0.4029	0.1757

※음영 표시가 신뢰수준 95%이상의 회귀계수, 밑줄 친 회귀계수는 신뢰수준 99%이다.

제 7 장 결론

1.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과 이를 통해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시행된 출산장려금 정책은 처음 도입된 시기부터 지금까지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본 연구에서 살펴본 출산 장려금 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국을 대상으로 살펴본 출산장려금은 합계출산율과 총 출생아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전국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 하기에는 해석에 한계가 있어 지역별로 세분화한 결과를 좀 더 살펴보았다.

가장 먼저 서울의 경우는 출산장려금이 합계출산율과 총 출생아수에 효과를 미치지 못했고 이는 전국과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강원도 역시 출산 장려금이 합계출산율과 총 출생아수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와는 다르게 충청도와 경기도는 출산장려금이 합계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라도, 경상도는 합계출산율과 총 출생아수 모두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출산장려금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지역이다. 이처럼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우 출산장려금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출산장려금 금액으로 이를 설명할 수 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의 연령별 효과이다. 출산장려금의 연령별 효과는 앞서 밝힌 것처럼 주요 출산층인 30대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국을 포함하여 서울,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에서 30-34세 연령층에 출산장려금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으며 경상도의 경우는 20-29세 연령층에서 효과가 나타나 타 지역보다는 출산층 연령층이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출생순위별에 따른 출산장려금 효과는 서울, 충청, 강원도에 서는 효과를 볼 수 없었고, 전국은 셋째아이에서만 효과가 나타났다. 경기도는 둘째, 셋째아이에서 경상도의 경우는 첫째, 셋째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부분에서 출산장려금 효과가 가장 높은 전라도는 출생순위별 효과에서도 역시 첫째, 둘째, 셋째아이까지 모든 순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줬다

현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은 셋째 이상을 출산하는 산모에게 많은 금액을 지원하여 다자녀 가정을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약 10년간의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와 통계청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출산율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특히 셋째 이상을 출산하는 산모의 수는 많지가 않은데 이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정책의 대상이 되어 혜택을 받는 수혜자는 적기 때문에 효과도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첫 아이를 출산하는 모(母)의 평균 연령이 30대를 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고령산모로 분류되는 35세가 되기 전에 셋째아이 이상을 낳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다수는 셋째 이상에게 지원하는 큰 규모의 혜택을 받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 주의 깊게 살펴본 결과는 출산장려금을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지급하는 전라도에서는 출산장려금의 효과가 상당히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출산율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다자녀 출산 장려를 위해 그에 대한 장려금의 규모를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같이 다자녀 출산을 통해 출산율 향상을 유도하려면 수많은 지자체의 예산이 드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은 출산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많기 때문에 전라도 만큼의 금액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위에서 밝힌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자치단체별로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은 그 지역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높은 출산장려금을 통해 효과를 보고 있는 전라도, 경상도와 같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일률적이고 일회적인 출산장려금 지급보다는 출산율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른 요인에(예를 들면 유치원수, 조혼인을 위한 정책, 일-가정양립) 집중하는 것이 정책에 기대하는 효과를 얻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예를 들면 여성경제인구비율이 높은 수도권(서울, 경기)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출산지원금을 받고자 출산을 하려는 산모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산모 지원 대책인데, 실질적 제도와 제도가 있더라도 쉽게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 등이 출산을 주저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이러한 원인이 출산율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서울과 경기는 타 지역에 비해 산모의 출산연령이 높기 때문에 출산 고위험군에 있는 산모들의 숫자가 많다. 따라서 고위험 출산군에 있는 산모지원서비스와 같은 정책 제도가 마련되어야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결국 출산정책의 본질은 출산장려금을 많이 지급하여 출산을 유도할 것인가? 아니면 출산 이후에도 마음 놓고 육아와 일을 병행 할 수 있는 여

건을 마련하여 출산을 유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물론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이뤄지고 있지만,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우선순위와 비중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규모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약된 예산을 가지고 보다 많은 수혜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과 경기 지역과 같은 인구 밀집지역에는 소소한 출산장려금 보다는 보육시설의 확대, 출산 이후의 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한 제도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며, 지방의 경우 보육시설과 서비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많은 출산장려금 지급을 통해 출산을 유도하는 방식이 먼저 이뤄져야 함을 시사한다. 즉, 양육과 교육에 다른 비용에 대한 보조 관점에서 수도권 출산장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여성이 양육과 교육 때문에 출산을 기피한다면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보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예산의 확충을 통한 장기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낮은 출산율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소수에게 많은 돈을 지급할 것인지(지방), 다수에게 적은 돈을 지급할 것인지(수도권), 이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출산장려정책의 집행이 긴요함을 직시해야 한다.

[표 39] 종합 결과표 요약

	합계 출산 율	총출 생아 수	연령별출산율							출생순위별		
			15-1 9	20-2 4	25-2 9	30-3 4	35-3 9	40-4 4	45-4 9	1st	2nd	3rd
전국					-	+	+	+				+
서울						+						
경기	+					+	+				+	+
충청	+				+	+		+	-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출산장려정책은 오래전부터 정부가 시행해온 정책으로 그 일환인 출산장려금은 2004년에서야 서서히 도입된 역사가 길지 않은 정책이다. 본 연구의 연구 범위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약 11년의 기간인데, 이 기간에 출산장려금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음이 밝혀졌지만, 2015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점차적으로 합계출산율과 총 출생아수가 증대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출산장려금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지난 11년간의 단편적인 결과를 도출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특이점에 대한 통제를 하지 못한 것 역시 본 연구의 한계이다. 최근 게재된 기사에서 전라남도 해남군은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내는 그렇게 기쁘지 않았음을 알려주었다. 이유인즉슨,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출산을 해남에서 하려고 몰려들어 막대한 출산장려금을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원인으로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 전입했다가 받은 뒤 전출하는 인구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쉽게 파악할 수 없었던 변수로 후속 연구에서 다시 진행하기로 하겠다.

<참고문헌>

민인식· 최필선(2009)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서울: 한국STATA 학회.

박다운·유계숙.(2011). 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시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한국가족복지학>.16(2)

박미혜. (2006). “우리나라 저출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복지지원 학회지>. 제2권 제2호, 55-67.

박은미. (2007). “저출산 실태분석과 정책과제”. 안양대학교 <복지행정학회>. 제23권, 317-335.

박창우·송헌재.(2014).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추정. <한국응용경제학회>. 16(1).

배상석. (2010). 출산장려금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수도권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19(4): 273-298.

석호원.(2011).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 중심으로.<지방행정연구>. 25(2).

송헌재·김지영(2013). 출산장려금이 기혼여성이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재정정책논집>. 15(1).

신효영·방은령.(2008).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 분석: 충청남도 시·군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3(4).

이명석·김근세·김대건.(2012). 한국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분석.<한국행정연구>. 21(3).

이미란.(2009). 출산 장려 정책이 미혼 여성들의 출산 양육 동기에 미치는 영향.<한국가족복지학>. 14(3)

이미옥·명성준.(2015).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9(1). 331-350

이석환.(2011). 기초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의 출산율과 인구유입에 대한 효과.<추계학술대회 한양대학교?>

이성용.(2009). 출산순위별 출산증가 요인 분석.<한국인구학회>. 32(1)

배상석. (2010). 출산장려금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수도권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19(4): 273-298.

최상준·이명석.(2011).지방자치단체 저출산 정책의 효과:광역자치단체 출산·양육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최정미.(2011).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이 출생아수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정책과학연구>. 20(1)

최준욱·송헌재.(2010). 저출산 대응 재정 정책수단의 효과 및 영향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허만형·이정철.(2011).출산장려금의 정책효과 연구:제도도입 전후 출산율 증감경향 비교분석.<한국정책연구>. 11(3).

통계청: www.kosis.kr.

보건복지부. (2011).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동향분석>.

보건복지부. (2011). <2011년도 인구정책사례집>.

보건복지부.(2012).<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2010>

Drago, R. K. Sawyer, K. Sheffler, D. Warren & M. Woodem. (2009).
Did Australia's Baby Bonus
Increase the Fertility Rate? Melbourne Institute Working Paper.

Ermisch, J. 1988. The econometric analysis of birth rate dynamics in
Britain.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23(4): 563-576.

Gauthier, A. H., & Hatzius, J. 1997. Family benefits and fertility: An
econometric analysis.
Population Studies 51: 295-306.

Kalwij, A., "The impact of family policy expenditures on fertility in
WesternEurope", Demography, Vol. 47, No. 2, 2010, 503-519.

Kim, A. Young-II, "The Impact of Birth Subsidies on Fertility: An
empirical study of the Allowance for Newbom children", Working
Paper, Sogang University, 2011.

Milligan, K., " Subsidizing the Stork: New Evidence on Tax
Incentives and Fertility",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87, No. 3, 2005, pp.
539-555.

Vikat, A., "Women's labor force attachment and childbearing in Finland", Demographic Research, 2004.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Korea's Childbirth Grant Policy

Eun A, Choi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is currently on the verge of an unprecedented demographic transition due to its extremely low birth rate and rapid population aging. In response, the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aimed at addressing these issues. Among those policies is the childbirth grant, which took effect in 2000 and was officially implemented nationwide in 2004. As of now, almost all local governments are providing this grant to mothers that have given birth. However, despite such efforts, the country's birth rate has not increased by much since the policy was first introduced. Thus,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s childbirth grants and the country's birth rate.

I constructed a set of panel data using information collected by 179 local governments from 2004 until 2014, and I categorized the different elements that affect birth rate as demographic, economic,

and social factors.

The study's dependent variables were divided up into the following four models: 1. total fertility rate, 2. total number of births, 3. fertility rate according to age, and 4. total number of births according to birth order. I conducted regression analysis to look at the impact that childbirth grants have on each of the dependent variables. According to the study's findings, in Jeolla and Gyeongsang provinces, where the amount of financial support is relatively higher, the grant had a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 on birth rate. By contrast, the link was weak in the capital and surrounding areas, where the total budget is higher but the amount of the grant lower due to the high the number of eligible recipients.

For these reasons, I propose that local governments in the capital and surrounding areas focus more on investing in daycare facilities and providing more support for infant care services. On the other hand, local governments in other areas should continue to provide more grants than the metropolitan areas and use that as a strategy to raise the nation's overall birth rate.